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석사학위논문

칸트 실천철학에 있어서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 치 학 과
민 경 남

요약(국문초록)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정치적 세속주의의 근대적 원칙이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탈세속주의적[post-secular] 조건은 정치와 종교의 새로운 원리적 관계를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칸트 실천철학 체계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를 통해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칸트의 사유 속 정치와 종교 사이의 독특한 원형적 관계를 해석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칸트는 실천철학의 일환인 정치철학과 종교철학을 통해 정치와 종교가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자율적 질서의 영역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칸트의 정치철학과 종교철학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상이한 원리의 토대 위에 구성되는 정치와 종교의 두 영역이 공존할 때 나타나는 긴장 관계를 포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정치와 종교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칸트의 실천철학이 갖는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철학적 작업의 배경이었던 근대 초기 유럽의 전(前)세속주의적 조건에 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시기의 유럽은 전통적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종교적 질서와 새롭게 형성된 정치적 세속주의가 대립적으로 공존하던 과도기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칸트의 실천철학은 정치와 종교의 정당한 구성원리를 제시하고 이러한 원리를 통해 정치-종교적 현실에 변화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칸트 정치철학은 세속적 법질서와 시민들의 자율적 입법 행위를 정당화한다. 칸트는 정치적 저작 속에서 일관적인 태도로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근거하여 헌법의 공화주의적 입법으로서의 국가 또는 시민사회 건설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칸트는 이러한 공화주의 국가를 토대로 한 정치적 질서가 보편화 가능하다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화주의적 제도를 토대로 전세계적 차원의 보편적 평화와 시민 개인의 자율적 존재로의 계몽이 가능하다.

한편, 칸트 종교철학은 인간의 실천이성이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종교를 필연적으로 요청함을 밝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요소들을 도덕종교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윤리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들을 도출한다. 특히 『종교론』의 3부는 현실의 정치공동체의 한계에 대

한 비판적인 인식의 토대 위에, 인류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서는 교회의 형식에 근거한 종교적 차원의 윤리적 공동체의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칸트의 정치철학과 종교철학에서 제시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칸트가 원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정치와 종교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의 입법에 의해 구성되는 정치적 질서와 신에 대한 이성적 믿음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종교적 질서는 그 구성원리의 측면에서 상호 배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와 종교는 현상적 세계 내에 보편화 가능한 정당한 질서로서 동시에 공존한다. 이때 정치와 종교는 상이한 질서로서 중첩되면서, 각각의 논리에 따라 정치는 종교를 포섭하고 종교는 정치를 포섭하려는 상호 포섭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와 종교의 사이에는 단순한 양립을 넘어선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본 연구는 칸트 실천철학의 전반적인 구도 속에서의 칸트가 사유했던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해석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크게 세가지 차원의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칸트 실천철학에 대한 균형잡힌 해석을 통해 정치와 종교의 문제에 관련한 기존의 해석적 입장들 간에 발생하고 있는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본 연구는 칸트 철학 체계 내에서 갖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치사상적 연구들로부터 비교적 적은 관심을 받아온 종교철학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칸트의 정치철학적 사유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밝힌다. 셋째, 본 연구는 칸트의 실천철학의 전반적인 구도 속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사유를 해석해냄으로써, 오늘날의 탈세속주의적 조건 속에서 부각되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사유의 단초를 제공한다.

.....

주요어 : 칸트실천철학, 정치와 종교, 세속주의, 공화주의 헌법,
도덕종교, 윤리적 공동체

학 번 : 2009-20099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검토	6
3. 논문의 구성	13
II. 칸트 정치철학의 기획과 종교적 함의	17
1. 칸트 정치철학의 구도: 세속적 정치질서의 원리적 이해와 정당화	17
2.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 원리와 정치적 진보	25
1) 자연과 인간 이성	26
2) 국가의 공화주의적 입법	30
3) 정치적 희망: 영구평화와 시민의 정치적 자율성	35
3. 칸트 정치철학이 종교적 함의	39
III. 칸트 종교철학의 기획과 정치적 함의	44
1. 칸트 종교철학의 구도: 도덕종교의 발견과 기독교 신앙의 재해석	44
2. “지상에 신의 나라 건설”: 기독교의 재해석과 인간의 도덕적 완성의 원리	50
1) 인간의 윤리적 현실로서의 근본악	51
2) 성서 해석과 도덕적 인간 완성의 가능성	54
3) 윤리적 자연상태에서 윤리적 공동체로	56
3. 칸트 정치철학의 종교적 함의	62
IV. 결론: 칸트 실천철학에 있어서의 정치와 종교의 긴장	67
참고문헌	79
Abstract	89

일러두기

논문에서 주된 분석 대상이 될 칸트의 저작을 언급하고 인용할 때는 저작 별로 아래와 같이 약칭과 약호를 사용한다. 칸트의 저작을 인용할 시 면수의 표기는 관례에 따라 베를린 학술원판을 기준으로 하며, 권수와 페이지를 각각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약칭(원제)	약호
『제1비판』(<i>Kritik der reinen Vernunft</i>)	KrV
「계몽」(<i>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i>)	WE
「보편사」(<i>Idee zu einer allgemeinen Geschichte in weltbürgerlicher Absicht</i>)	IUH
『정초』(<i>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i>)	G
『제2비판』(<i>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i>)	KpV
『종교론』(<i>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i>)	R
「이론과 실천」(<i>Über den Gemeinspruch: Das mag in der Theorie richtig sein, taugt aber nicht für die Praxis.</i>)	TP
「영구평화론」(<i>Zum Ewigen Frieden</i>)	PP
「법이론」(<i>Metaphysik der Sitten, Rechtslehre</i>)	MM
「논쟁」(<i>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sche Religionslehre</i>)	CF

I. 서론

1. 문제제기

최근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공적 담론과 학술적 논의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주지하듯 20세기 후반부터 두드러진 종교적 동기에 근거를 둔 새로운 유형의 세계정치적 현상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Remer and Schmidt 2010). 최근의 논의의 흐름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 문제는 주로 근대정치체제 내에 일반화되어 있는 정치적 세속주의의 원칙에 대한 국내적, 지역적, 초국적 수준의 종교적 도전의 형식으로 파악된다. 2001년 9월 11일에 벌어진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로 상징되는 가장 말초적인 수준의 폭력으로부터, 근대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반성과 인본적 윤리의 회복을 요구하는 종교지도자들의 성찰적 담론이 각국의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종교는 공적 영역의 경계 안팎에서 현대인의 정치적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는 중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정치공동체 내 종교의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종교 간의 공존, 그리고 종교적 시민과 비종교적 시민간의 공존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정치과정에서 종교공동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종교는 효과적인 정치적 동원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어떤 이들에게 이와 같은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정치적 세속주의 원칙이 위협을 받는 상황은 근본적인 정치적 불안의 요소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종교적 입장들을 중립적인 정치적 공론장에 포섭할 수 있는 원리의 모색이 요구된다. 반면, 어떤 이들에게 최근의 종교적 도전은 근대 정치적 조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폭로하고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할 기회이다.

하버마스 등의 논자들이 “탈(脫)세속주의 시대”[post-secular age]라 명명하고 있는 종교적 원리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정치적 세속주의의 원칙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오늘날의 정치적-종교적 상황은, 근대 초기 유럽의 “전(前)세속주의적 시대”[pre-secular age]의 조건과 상당한 연관성

을 갖는다. 종교적 원리로부터 자유로운 세속적 정치질서에 대한 관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매우 근대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정치적 세속주의의 연원은 근대 초기의 유럽으로부터 찾아질 수 있다. 근대 초기의 유럽은 유럽인들의 정신문명의 기축을 이루고 있던 기독교 신앙에 토대한 일원적인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탈피하여 근대적인 세계관이 형성되던 시기였다. 16-18세기에 이르는 동안 유럽사회는 기독교 교회의 대분열과 종교전쟁으로 종교의 전통적인 권위가 위기에 봉착하던 가운데, 자연과학의 성과에 힘입은 새로운 지적 풍토가 성장하였으며, 절대주의 국가와 시민혁명을 거치며 본격적인 근대적 국가체제가 형성되는 전례없는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Collas 1997, Koselleck 2000, Rawls and Herman 2000). 근대 초기 유럽의 전세속주의적 조건 속에서는 여전히 도덕적 체계모니를 유지하고 있던 전통적인 종교적 질서와 새롭게 형성되던 세속적 정치질서가 대립적으로 공존하였으며, 오늘날 우리가 “계몽주의”라 지칭하는 일정한 정치적 사유가 세속적 정치질서를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근대 초기 유럽의 전세속주의적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 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근대정치체제 속에 일반화되어 있는 정치적 세속주의의 원칙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대 초기의 유럽에 형성된 정치적 사유, 특히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계몽주의의 전통을 대표하는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04-1704]의 실천철학적 사유는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한다. 칸트는 당대인들에게 의해 “모든 것의 파괴자”[all-destroyer]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당대 유럽의 지적 전통에 대한 전 방위적 비판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식론, 윤리학, 미학, 신학, 정치학, 역사이론 등에 이르는 폭넓은 범위의 저술을 통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근대철학의 체계를 구축한 인물이다(Palmquist 2000, 3).

그런데 정치와 종교의 관계 설정이라는 문제에 집중하여 칸트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칸트 해석에 근본적인 불일치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관련하여 칸트의 철학적 태도를 해석하는 입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보다 일반적

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첫 번째 해석적 입장은 칸트를 세속적 자유주의자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칸트 철학을 대표하는 저작이라 할 수 있는 『제1비판』의 인식론적 주장을 근거로 칸트가 전통적인 신학적-형이상학적 지식의 성립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론적 근거 위에서 「보편사」, 「영구평화론」, 「법이론」 등의 칸트의 정치적 저작들에서 드러나는 사회계약론적 측면을 주목하고, 칸트가 인간의 자유로운 이성적 능력에 근거한 공적인 정치질서의 수립을 정당화한 것이 칸트의 중요한 기여라고 본다. 이러한 해석적 입장에서는 칸트 철학이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영역의 구성원리로 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는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세속주의적 원리의 이론적 근거인 것으로 이해한다(Bernstein 2009; Habermas 2008; Rawls 1997, 2005). 그리고 이러한 칸트 철학에 대한 세속주의적 이해는 현대정치체제의 세속주의적 특성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상당 부분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Milbank 1993). 이러한 입장과 상반되는 두 번째의 해석적 입장은 칸트를 계몽적 신학자로서 해석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칸트의 역사철학적 서술 속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목적론적 설명과 이신론적 섭리[deistic revelation]의 특성에 주목하여, 칸트의 사유 속에 나타나는 기독교 신학 전통의 흔적을 발견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칸트가 그의 종교철학의 주저인 『종교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덕법칙의 입법자로서의 신에 대한 믿음을 역설하는 측면은 칸트를 비전통적 유신론자[unorthodox theist]로까지 평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은 칸트가 기독교의 재해석을 통하여 인간의 도덕적/정치적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칸트 철학에 대한 세속주의적 해석과 일정한 대립각을 세운다(Lilla 1998, 2008; Taylor 2007). 이와 같은 칸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발견되고 있는 근본적인 불일치는 칸트 실천철학에 대한 더 세밀한 검토를 요구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칸트 실천철학의 전체 체계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를 해석함으로써,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관련한 논쟁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칸트 철학 내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기존 논자들은 칸트의 저작을 일부만을 살펴보거나, 그의 저술을 폭넓게 다루는 경우에도 특정한 흐름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칸트의 사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다는 점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칸트의 전체 실천철학의 체계에 대한 예비적 구분 속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칸트는 하나의 일관된 윤리적 관심 속에서 실천철학의 논의들을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실천철학은 크게 인간의 윤리적 자율성의 선험적 구성원리를 밝히는 “도덕철학”과, 이러한 도덕철학의 원리를 인간의 삶의 경험적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원리와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사유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실천적 사유들을 그것이 주제로 다루는 인간의 삶의 영역 구분에 따라서 정치철학, 종교철학 등으로 다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칸트의 실천철학의 구도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본 연구는 먼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향에서 칸트의 실천철학 속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사유를 추적한다. 본 연구는 먼저 「보편사」 [1784], 「계몽」 [1784], 「이론과 실천」 [1793], 「영구평화론」 [1795], 그리고 「법이론」 (1797) 등 칸트의 정치적 저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칸트 정치철학의 기본 기획을 확인하고, 이것이 어떠한 종교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본다. 이어서 본 연구는 『종교론』 (1793), 「논쟁」 (1798) 등을 중심으로 칸트의 종교철학의 기본 기획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차적인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칸트의 사유 속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종교 사이의 일정한 긴장 관계를 확인한다.

이러한 측면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칸트 정치철학은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에 토대하여 모든 인간의 자유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속적 법적 질서로서의 정치공동체 입법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정치적 질서는 종교가 갖는 외면적인 요소들을 포섭한다. 반면, 칸트 종교철학은 인간이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종교적 믿음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전제하에 보편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재해석하여 그 본질적인 요소들을 수용하는 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철학적 사유에서 현실의 정치 질서는 그 자체로서 일종의 윤리적 자연상태이며, 이것은 오직 종교적 차원의 윤리적 공동체 수립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칸트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즉, 칸트는 상호 배제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정치와 종교의 두 윤리적 질서의 영역을 동시에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철학과 종교철학의 상이한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본 연구가 주목하는 칸트 실천철학적 차원에 있어서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가능하다. 칸트의 실천철학적 사유 속에서 우리는 정치와 종교를 상호 배제적인 원리에 근거한 두 정당한 질서로서 인정하면서, 두 영역이 상호 간에 긴장을 이루면서 공존하는 독특한 관계를 해석해낼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대 이전의 유럽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결합되어 발생하던 지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며, 이때 칸트는 정치와 종교의 결합을 해체하여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시키되 두 영역의 어느 쪽에도 완전한 우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상호 간에 일정한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두 영역 간의 관계를 구상했다.

본 연구는 칸트 실천철학의 전반적인 구도 속에서의 칸트가 사유했던 정치와 종교 간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크게 세 가지의 함의를 갖는다. 첫째,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칸트 철학의 해석에 발생하고 있던 일정한 불일치를 해소한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칸트 실천철학의 일정한 부분에 초점을 둬으로써 칸트를 단순히 세속적 자유주의자 혹은 계몽적 신학자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칸트 실천철학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정치철학과 종교철학을 균형있게 살펴본 본 연구는 해석상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치사상 연구들로부터 비교적 적은 관심을 받아온 칸트의 종교철학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칸트의 정치적 사유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지를 밝힌다. 이때 종교는 정치적 질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

는 시민들의 윤리적 실천을 통해서 정치적 영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가 밝히고 있는 칸트의 원리적 사유 속에서 발견되는 정치와 종교의 독특한 긴장 관계는,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탈(脫)세속주의적 여건 속에서 새롭게 요청되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 설정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사유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존연구검토

오늘날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관심의 차원에서 칸트 철학을 중요하게 다루는 정치철학 또는 정치사상 연구들은, 칸트 철학 일반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해석상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겪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지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세속적 자유주의’의 해석과 ‘계몽적 신학’으로의 두 해석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칸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전자에 해당하는 세속적 자유주의의 해석으로, 이러한 해석을 대표하는 인물로 롤즈와 하버마스를 들 수 있다. 먼저 롤즈는 칸트 철학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대체하기 위한 차원에서 등장한 근대철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다(Rawls 2009). 롤즈는 공적 영역 자체의 중립성을 전제로 종교적 교설들이 공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자유주의의 구상에 있어서 칸트의 이성의 이념[idea of reason]은 하나의 역사적인 근원이다(Rawls 1997, 2005). 하버마스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종교적인 차원이 갖는 정치적 역할의 확대에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는 종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 자체의 기능만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근대성의 부작용들을 바로잡는 데에 있어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Habermas 2008, 2010).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하버마스는 특히 칸트의 『종교론』에 주목하는데, 이것은 종교적 언어를 세속적 언어로 번역

[translation]함으로써 “신앙과 지식의 우주 사이의 경계선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종교의 의미론적 유산을 흡수하는 관점”의 전거를 제공한다(Habermas 2008). 칸트와 하버마스로 대표되는 칸트의 자유주의적 해석에는 칸트의 경험적[empirical], 탈형이상학적[post-metaphysical] 인식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으며, 이들은 정치적 차원에 있어서도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토대한 공적 질서 수립의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 이러한 측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자유주의적 입장은 칸트 철학의 이성적/지식적 측면을 중심에 두고 칸트의 정치철학을 이해하는 한편 이러한 세속적 정치영역과 종교적 영역의 명확한 구분선을 강조한다(Bernstein 2009). 이러한 종교의 정치적인 영향을 제한하는 인물로서의 칸트 이해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대하여 비판적인 현대의 연구자들에게도 상당 부분 통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밀뱅크에 따르면 칸트는 정치와 종교의 영역적 단절의 논리를 완성시킨 세속적 자유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다(Milbank 1993). 이러한 입장에서 칸트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의거한 정치적 영역 구성원리를 제공한 인물로 평가되며, 이러한 평가는 칸트 철학에 있어서 정치와 종교를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 측면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입장은, 인간의 이성의 능력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 공적영역을 전제하고 있으며, ‘종

1) 인식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칸트를 세속적 인물로 평가하는 경향은 칸트 해석에 있어서 전통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Firestone 2009). “제1비판”을 중심으로 칸트의 경험적 지식의 절대적 조건에 대한 인식론적 사유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칸트의 인식론은 초감성적인 세계와 물 자체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며, 물 자체에 속하는 것이 인간의 감관에 대한 영향[affection]을 통해 표상으로 주어진 것이 지식 또는 의식[knowledge or consciousness]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인간의 자유의 현실[fact of human freedom]이나 도덕적 정의에 대한 지각은 감각에 의해서 경험될 수 없기 때문에 예지적[noumenal]이라 불리며, 따라서 지식의 문제로는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즉 종교적인 것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인간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자유의 소산으로 생각되어야 한다(Strawson 1966, 240-241). 우드는 이러한 『제1비판』의 인식론적 전제를 훼손하지 않고 종교적인 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해석적 근거를 제공한다. 우드는 하나의 설득력있는 절충적 입장을 제시한다. 즉, “제1비판”에 대한 전통적 독해로 야기된 칸트 철학의 지식과 종교의 대립적인 관계를, 칸트 비판철학 속 “자기 앎”[self-knowledge]의 지향에 주목함으로써 절충한다. 우드에 따르면 칸트의 사유 속 인간은 감성[sensibility]과 이성[reason], 그리고 한계[limitation]와 가능성[capability]을 동시에 지니는 이중적인 존재이다(Wood 2009, 3). 그리고 인간의 종교적 공동생활은 ‘이성적 신앙’의 임무 즉 “더 높은 삶의 열망에 토대한 초월적 관념의 제한적 채움”에 의해 설명된다(Wood 2009, pp.8).

교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 혹은 사회의 특수한 집단의 수준에서 형성할 수 있는 의견으로서 공적 담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공한다.²⁾

이와는 반대로, 칸트를 계몽적 신학자로서 해석하는 입장들도 상당수 발견된다. 신학적인 관심에 의하여 테일러는 칸트의 계몽철학이 그 자체로서 기독교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비전통적 유신론자[unorthodox theist]로서 인간이 주어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근거를 신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찾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Taylor 2007).³⁾ 릴라는 근대 초기의 종교에 대한 담론 속에서 “de-Christianization”와 “post-Christianization”를 개념적으로 구별한다. 전자가 서구사회가 기독교 교회와 광신주의, 종교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세속화의 일면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교회가 근대사회의 도덕적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릴라는 칸트가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칸트의 종교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하는 한편, 특히 후자의 차원에서 더 큰 의의를 찾는다. 그에 따르면 칸트의 철학적 작업이 일종의 “도덕신학”[moral theology]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가 인간의 영원한 욕구이고, 적절히 개혁된 기독교가 인간의 도덕적 성장에 가장 적절한 종교라는 점을 견고하게 입

2)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입장은 다양한 차원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공적 영역을 종교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구성하는 것은, 종교적 시민이 정치적인 참여를 할 때 스스로의 종교적 자아와 스스로를 분리해야 함을 뜻한다(Cooke 2007; Yates 2007) 자유주의적 입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다문화주의 또는 공적영역의 다원화를 제안하고 있다(Bhargave 2011; Bohman 2000).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틀 속에서는 종교적 시민이 관용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남는다(Brown 2009)

3) 테일러의 “비전통적 유신론자”로서의 칸트 이해는 신학적 동기에서 칸트 철학을 완전한 유신론자로 해석하는 입장과도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팔퀴스트는 비판철학을 비롯한 칸트의 전체 철학 체계의 기저에는 비판적 종교의 기획이 자리잡아있으며, 칸트의 철학이 “신 중심적”[Theocentric]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신 중심적 철학이란, “신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다른 모든 지식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신의 실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칸트]의 철학을 이끄는 중심적 힘으로서 작동한다는 것이다”(Palmquist 2000, 8) 헤어의 경우도 종교철학의 일부 요소들을 근거로 칸트 종교철학이 기독교 신앙의 완전한 계승이라고 본다(Hare 1997). 그러나 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칸트를 완전한 ‘기독교 철학자’로 해석하는 입장은 반대로 칸트가 추구한 근대적 자유의 이념이 갖는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증”하면서, 그러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개혁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릴라는 “신학-정치”라는 표현을 통해, 칸트 당대에는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였고, 따라서 기독교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철학이 곧 정치철학임을 주장한다(Lilla 1998). 나아가 릴라는 현대의 종교적 선입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이성적 공론장의 관념은 허구이며, 정치의 영역은 신학적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정치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Lilla 2008).⁴⁾ 칸트 철학의 종교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정치철학의 함의를 이끌어내려는 이와 같은 시도 역시도 또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칸트를 해석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면이다.

이와 같은 정치와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칸트 해석의 입장 차는, 어느 한 쪽 입장이 칸트의 철학을 오해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해석자가 어떠한 의도로 칸트 철학의 어떠한 측면에 주목하여 칸트를 해석하는가의 전략적인 측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칸트 해석의 입장 차에 있어서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칸트의 철학적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종교철학 또는 정치철학이라고 분류하는 칸트의 저술들은 사실상 칸트가 ‘윤리학’의 범주 내에서 저술한 작업들을 오늘날의 우리의 기준에 따라, 칸트는 ‘정치철학’ 또는 ‘종교철학’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이것이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가 어떠한지를 적시하지 않

4) 테일러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근대의 세속적 질서가 전근대 사회를 지배해온 기독교 자체 내의 진정한 종교성의 자각과 이를 지향하는 역사적 운동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종교적 초월성[transcendence]으로부터 내재성[immanence]의 원리가 분리되었고, 이것이 곧 오늘날의 정치적 영역이 구성된 과정이라는 것이다(Taylor 2007). 칼훈은 이와 관련하여 종교가 그 자체로서 “공적 영역의 계보학의 일부”라고 평가하면서, 공적 이성의 개념을 종교로부터 단절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종교가 근대 사회의 공적 영역의 형성에 미쳤던 의미론적 기여를 경시하는 것이라 지적한다(Calhoun 2011) 자렛은 하버마스가 주목했던 18세기 영국 자유주의 공론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토대가 17세기 영국의 종교적-신학적 변동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자렛에 따르면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 프로테스탄티즘 내에 평신도 중심주의의 움직임을 비롯해 계약신학[covenant theology], 이신론, 자연신학[natural theology]과 같은 조건을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영국 시민사회 내의 자유주의적 공론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선결조건이다(Zaret 1992). 머피는 미국정치사상 전통의 이상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종교적 관용이 정치적-법적인 역사과정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정치와 종교의 영역적 명확한 구별이 실제의 영역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통찰을 제공한다(Murphy 2010).

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칸트의 철학으로부터 세속적 자유주의자 혹은 계몽적 신학자의 성격을 읽어내는 해석적 입장의 양측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칸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주요 연구들의 관점 차는, 본 연구로 하여금 칸트의 윤리적 저작으로서의 실천철학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하나의 가능한 관계를 해석해내고자 하는 접근법을 택하도록 한다.

본 연구가 칸트 철학으로부터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치와 종교의 개념은, 칸트의 실천철학 내에서 도덕철학적 원리를 근거로 인간이 실제의 삶에서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원리적 구상으로서 칸트가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공동체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형태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지에 의한 법의 입법과 정당한 강제력의 구성의 문제를 정치라고 한다면, 이와 관계없이 순수한 윤리적 원칙을 공유하고 그를 실천함으로써 구성되는 공동생활은 종교라고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칸트철학에 있어서의 정치와 종교의 개념 이해는 기존의 연구들로부터 상당한 빛을 지고 있다. 칸트 철학에서 본 연구가 읽어내고자 하는 정치의 차원은 시민들의 보편적 동의에 의하여 법적 강제력의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에 관련이 있다. 라일리는 칸트의 「법이론」에서 칸트 정치철학의 소재를 찾으며 이것이 국가 내의 권력 관계에 대한 사회계약적 사유에 대하여 의무의 관념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사유의 완성으로서 “적절한 사회계약”을 제시했다고 본다(Riley 1999). 립스타인은 역시 「법이론」을 중심으로 법적인 소유를 확정하는 국가의 입법이 칸트 정치철학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보고 있는데, 이때 공법으로서의 국가의 수립은 단순히 도덕철학적 정언명령을 현실의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들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으로서 필연적임을 강조한다(Ripstein 2009). 이와 같은 라일리와 립스타인의 해석은 칸트 정치철학의 기본 단위로서의 국가가 갖는 법적 질서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엘리스는 “계몽”과 같은 칸트의 정치적 에세이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칸트 정치철학의 역동적인 정치적 발전이론으로서의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

고 있으며, 이때 공공성[publicity]의 확보가 지속적인 정치적 발전을 야기하여 정치적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Ellis 2005). 칸트 정치철학은 이러한 측면에서 세속적으로 구성된 정치질서를 정당화하는 한편, 정치질서 자체가 하나의 이상적인 차원에서 보편화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칸트의 사유 속 종교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그 자체로서 의무로서 받아들이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 노력의 체계이다. 요벨에 따르면 칸트의 실천철학은 『정초』와 『종교론』의 두 단계로 나뉜다. 전자의 단계에서 칸트는 도덕적 선의지의 구조와 도덕의 절대적 원리의 성격을 설명하지만, 후자의 단계에서 칸트는 행위와 관련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구상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의무에서 그 자체로서 목적인 의무로의 전환이 발생한다(Yovel 1980). 바론에 따르면 칸트의 종교철학은 인간의 현상적 차원에서의 도덕적 기질에 대한 측면과, 이러한 기질을 넘어서 인간의 주체적인 도덕적 완성의 차원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도덕철학의 설명을 보다 자연스럽게 만든다고 본다. 바론에 따르면 오직 종교철학의 단계에서 인간의 기질과 주체적인 도덕적 목적설정의 개념을 도덕적 실천에 도입함으로써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도덕적 실천이 가능해진다(Baron 1987). 이때 칸트의 종교철학에 있어서 근본악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도덕성의 획득이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이고자 하는 주체적인 노력이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Michalson 1990). 클라인겔드는 칸트의 인간의 근본악과 도덕적 발전의 관념을 제시하는 종교철학이 도덕철학에 있어서의 도덕법칙의 보편성, 도덕적 주체의 예지적 특성, 그리고 모든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는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칸트의 종교철학이 도덕철학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Kleingeld 1999). 이때 칸트의 종교철학은 도덕철학의 연장선 위에서 종교가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칸트의 전체 실천철학의 체계를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종교철학이 도덕철학

의 확장이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실천의 체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칸트 종교철학이 인간의 도덕적 완성의 가능성에 대한 사유임을 전제로 하되, 이것이 윤리적 공동체라는 하나의 사회적 형식을 통해 이와 같은 도덕적 완성의 가능성을 모색한 것에 보다 초점을 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칸트의 정치철학과 종교철학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했을 때, 각각의 실천적 사유에서 원리적으로 구성된 정치와 종교는 상호 간에 과연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가? 먼저 라일리는 칸트의 정치철학과 종교철학의 각각의 최종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보편적 공화주의”와 “보편적 윤리적 공동체”를 상호 비교하면서 칸트가 궁극적으로는 후자인 “덕의 비강제적 법 아래에 사는 보편적 윤리공동체”를 보다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다고 언급한다(Riley 2007). 하지만 이것은 칸트가 정치와 종교를 별도의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을 때, 반드시 타당한 주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칸트는 정치와 종교를 논할 때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 영역에 대한 완전한 우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나아가 최근의 연구들은 이전에 정치사상연구에서 비교적 경시되어 왔던 칸트의 종교철학적 사유가 갖는 정치영역에 대한 함의에 주목하면서, 칸트의 실천철학 속에서 형성되는 정치와 종교의 현실적인 상호 관계를 해석하는 할 가능성을 보여줬다.⁵⁾ 드브라이스는 칸트의 『종교론』에 주목하지만 여기에서 다루는 철학적 신학의 문제 자체보다는, 해당 저술이 출판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검열과 칸트의 반발을 나중의 저술인 「논쟁」에서의 철학부의 신학적 자유에 대한 논의와 연결지어서 논의한다. 철학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드브라이스의 논의는 종교-국가-공동체-공론장의 연결선상에서 칸트의 종교철학을 현대적인 정치철학적 문

5) 보다 일반적인 정치와 종교의 논의에 있어서, 종교의 적극적인 정치적 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들이 존재한다. 달마이어는 비교정치사상적/ 비교종교적 관점에서, 다양한 종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근대 정치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인본적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Dallmayr 1999, 2012). 크리츨리는 한발 더 나아가 인간의 진정한 정치의 차원인 이타성이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가능한 탈아적 상태에 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Critchley 2012).

제로 확장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De Vries 2001). 바이너는 칸트의 종교철학을 루소의 시민종교의 개념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한다(Beiner 2010). 시민종교란 “정치의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한 종교의 전유”를 의미하며, 루소는 『에밀』에서 일종의 이신론적인 입장을 시민종교의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했다(Beiner 2010, 1, 215-216). 칸트는 루소의 영향 하에서 기성종교인 기독교의 교리를 도덕주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대한 자유주의적 전통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화”의 이론을 제공했으며 이것은 시민적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Beiner 2010, 228). 디센소는 종교를 일반적인 국가와 같은 정치영역에 대비하여 별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일종의 문화로서 해석한다. 그는 잉글랜드의 ‘정치적인 것’의 의미적 구별을 차용하는데 이것은 정치의 개념을 일반적인 권력적 정치를 의미하는 ‘la politique’와 일종의 정치문화를 의미하는 ‘le politique’고 칸트가 종교철학을 통해 형성하는 종교의 관념은 후자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언급한 릴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디센소에 따르면 칸트의 종교철학은 정치의 권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종교적 세계관과, 종교적 세계관이 정치적 타율성을 강화하는 악순환 속에서, 종교적 담론으로부터 윤리적 원리를 이끌어 내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칸트의 기독교에 대한 계몽의 작업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윤리적 자율성의 차원을 경유하여 정치적 자율성의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DiCenso 2011; Lilla 2008). 이러한 연구들은 ‘정치와 종교’에 관련한 칸트의 연구들은 주로 칸트 종교철학에 대한 논의에 토대를 두어 이것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한편, 비교적 가시적인 단위인 정치공동체에 대한 대비 속에서 종교의 사회적 형태에 대한 해석을 보인다.

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칸트 실천철학의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

에 대한 사유를 해석하기 위하여 크게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칸트의 정치철학의 기획을 살펴본 후 그 종교적 함의를 해석할 것이다.(제2장) 이어서 칸트의 종교철학의 기획을 검토한 후 여기에 정치적 함의를 해석할 것이다.(제3장) 이와 같은 두 방향의 교차적 확인을 거친 후, 본 연구는 결론을 통하여 전체 실천철학의 구도 속에서 칸트의 정치와 종교의 구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에 대한 최근의 논자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칸트의 고유한 정치-종교사유가 갖는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 2장은 가장 먼저 칸트 실천철학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정치철학의 기획을 조망한다. 칸트 정치철학의 목표는 근대 초기에 새롭게 부상하던 세속적 정치질서를 원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칸트는 근대 도덕철학에서 수립한 자율성 개념과 인간 이성의 법칙수립적 능력에 근거하여, 인간이 사회계약적 방식으로 구성한 법적 질서로서의 정치공동체 형성을 정당화했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철학은 곧 법적 질서 수립의 문제였으며, 국가의 수립은 이러한 법적 질서의 확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칸트는 국가의 수립 또는 헌법의 입법이 시민들이 상호 간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단계이라고 주장한다. 칸트에게 있어서 이러한 국가의 입법에 기본이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며, 이것은 자연이 부여한 인간의 고유한 자유로운 인간의 능력이다. 이때 칸트는 특히 입법자와 통치자를 구별하는 공화주의적 입법을 원리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가 시민들의 원초적 계약에 의해 입법된 결과물이라는 관념은 그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국가의 통치방식을 변화시키는 규범적인 효과를 갖는다. 나아가 이러한 공화주의적 헌법형태는 전 지구상의 보편적 평화와 국가 내부의 시민의 정치적 자율성을 성숙시킬 수 있는 보편적 정치질서의 이상적 기획의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정당한 법적 체계로서의 정치질서는, 종교를 외적인 차원에서 포섭하되, 종교의 내적 원리에 대해서는 그 독자성을 인정하는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의 제 3장은 칸트의 실천철학의 독특한 측면을 담고 있는 종교철학의 기획을 살펴본다. 칸트는 인간의 도덕법칙의 실천을 위해서는 반

드시 종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덕종교의 개념을 도출하는 한편, 유럽 정신문명의 기축을 이루었던 기독교를 도덕종교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칸트는 기독교의 해석을 통해 도덕종교의 실천적 원리들을 도출하고 있는데, 칸트가 기독교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보편종교의 원리 하에 인간이 악한 상태에서 선한 원리의 획득으로 나아간다는 도덕적 실천과 도덕적 인간 완성의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칸트는 기독교로부터 원죄, 그리스도, 기독교 교회와 같은 핵심적인 요소들을 근본악, 인간의 도덕적 완성의 가능성의 표상, 그리고 윤리적 공동체로 해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칸트는 개개인의 도덕적 의무의 실현을 통해 인류가 보편적인 도덕적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신에 의해 보증되고 있음을 주장하여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그 자체로서 의무화한다. 이러한 칸트의 종교철학의 논의는 현실의 기독교 교단 및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식에 근거해있었으며, 칸트는 이러한 기존의 조직들이 윤리적 원칙의 부재로서 윤리적 자연상태에 처해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윤리적 자연상태의 극복을 위해서는 기독교 교회의 형식을 취하는 윤리적 공동체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칸트는 윤리적 공동체의 개념을 일종의 규범적 기준으로 활용하여, 현실의 정치공동체 및 종교공동체가 갖는 한계를 비판한다. .

결론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칸트의 실천철학의 체계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긴장관계를 해석하고, 그 함의를 밝힌다. 칸트는 정치와 종교가 상호배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각각 정당하고 필수적인 질서를 형성한다고 본다. 이때 정치는 외적 질서의 차원에서 종교를 포섭하지만, 이때 종교의 본질적인 내적 차원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반대로 종교는 도덕적 실천의 체계라는 점에서 정치적 질서를 상회하는 포괄적인 윤리적 질서를 형성하지만, 이때 여전히 정치공동체는 종교가 성립하기 위한 기초 조건으로서 남는다. 칸트의 실천철학적 사유 속에서 상호 배제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정치와 종교의 두 영역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상호 포섭적인 성격을 갖는 동시에 별개의 영역으로 공존함으로써 상호 간의 팽팽한 긴장에 근거한 균형을 이

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본 연구가 밝히고 있는 칸트의 정치와 종교의 긴장에 근거한 공존의 원리는,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정치적 세속주의의 원칙이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탈세속주의적 환경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원리적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II. 칸트 정치철학의 기획과 종교적 함의

1. 칸트 정치철학의 구도:

세속적 정치질서의 원리적 이해와 정당화

칸트는 그가 의도한 정치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나 그의 저술 중 어떤 것이 정치철학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언급을 남기지 않았으며, 오늘날 칸트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칸트의 복잡한 철학적 건축물 속에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어 칸트의 정치철학을 읽어낼 것인가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정치철학적 질문으로 남아있다.⁶⁾ 칸트 정치철학의 소재(所在)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 입장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칸트의 저술 중 인간의 외적 행위를 규제하는 정치적 질서 또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공적 제도의 가능성을 공통적으로 논하고 있는 「보편사」, 「영구평화론」, 「계몽」, 「이론과 실천」, 「법이론」 등의 저작을 칸트의 정치철학적 저작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저작들 속에서 칸트는 도덕철학에서 수립된 자율성의 이념이 인간의 실제적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

6) 칸트의 저술 중 어떤 것에 논의의 초점을 두는가의 여부만으로도 칸트 정치철학에 관련한 다양한 해석적 입장들을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엘리스는 이러한 측면을 잘 정리하고 있다. 현대의 칸트 정치철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몰즈는 “정초”, “제1비판”, “제2비판”을 중심으로 칸트를 독해하였다(Ellis 2005, 41). 이는 경험주의적 주체가 도덕적 원칙을 도출하는 원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적 원리를 도출하는 메커니즘으로 차용하기 위한 몰즈의 이론적 의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렌트는 “제3비판”을 중심으로 공동체 감각의 구성원리가 시민들의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하나의 보편적 인식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칸트 정치철학의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주장한다(Arendt 1989). 라일리과 립스틴은 “법이론”에 주목하면서, 법적 질서로서의 국가 수립이 갖는 특성을 밝힌다(Riley 1987; Ripstein 2009) 그리고 엘리스 본인은 “법이론”을 비롯하여 “영구평화론”, “계몽” 등 비교적 짧은 정치적 에세이들에 초점을 두어 칸트의 철학으로부터 정치적 변동의 가능성을 읽어내려고 한다(Ellis 2005). 릴라와 같이 칸트의 종교철학을 중심으로 그 정치적 함의를 읽어내려는 시도 역시도 하나의 ‘칸트 정치철학’을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Lilla 1998). 이와 같은 칸트 정치철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 입장들은 칸트 철학의 각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발전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중 본 연구는 칸트가 직접적으로 정치적 질서의 구성원리와 그 필연성 및 타당성을 다루고 있는 상술한 바와 같은 저작들을 중심으로 칸트의 실천적 사유로서의 정치철학을 다룬다.

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정치적 질서의 구성원리를 폭넓게 다룸으로써, 칸트 자신의 “정치”에 대한 원리적 이해를 잘 드러낸다.

칸트의 사유 속에서 “정치적인 것”이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논의는, 칸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정치”[*Politik*]의 개념에 대한 언급에 주목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구평화론」에서 칸트는 정치를 “올바름의 응용적 교설”[the applied doctrine of right]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것은 “올바름의 이론적 교설”[the theoretical doctrine of right]으로서의 “도덕”[morality]이 실제의 영역에 적용된 것이라 설명한다(PP, VIII:370). 이러한 점에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도덕을 인간의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또는 실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칸트는 이를 주로 인간의 외적 의무를 규정하는 “법”[*recht*]의 개념과 결부시켜 논의한다(MM, VI:219).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철학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정당한 정치적 질서를 원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이는 곧 인간의 보편적 동의에 의하여 정당한 법치[법치적 사회조직][law-governed organization of society](IUH, VIII:20), “법적 상태”[juridical condition, *gesetzlichen Zustände*](PP, VI:349), “공법”[*Öffentliches Recht*](MM, VI:311)]를 확립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칸트의 정치철학적 작업은 근대 초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회계약적 사유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넓게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속적 정치질서를 정당화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칸트의 작업은 홉스, 루소 등을 통해 전개되어 근대 초기 유럽의 정치적 사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회계약론의 이론적 흐름에 공명하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사회계약적 사유에 도덕적 의무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작업으로서 의의가 있었다(Riley 1987). 그리고 이러한 사회계약적 사유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 작업으로서 칸트 정치철학이 갖는 철학사적 의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세속적’ 정치질서와 유럽의 정신적/도덕적 전통으로서의 기독교적 세계관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이해할 때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유럽은 16세기 종교개

혁으로 기독교의 절대적인 권위가 약화되면서 근대적 세계가 형성되는 시기였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근대국가와 근대 과학이 발달했다. 특히 이러한 근대적 움직임은 중세를 지배했던 기독교 교회와 대비할 때 그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 중세를 통해 공고화된 기독교적 질서는 권위주의적, 구원중심적, 교조적, 사제중심적, 확장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며, 의무의 개념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법의 관념에 기초해 있었다(Rawls and Herman 2000). 이러한 전통의 영향 속에서 등장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사회계약적 정치 질서 구성의 사유는, 여전히 도덕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던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이단”[heresy] 또는 “광신”[fanatic]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인간의 자발적 능력에 토대한 시민사회[societas civilis] 구성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반감은 근대적 정치공동체 건설 움직임에 대하여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가 되었다(Colas 1997). 칸트의 철학적 사유는 이러한 16-18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과 세속적 정치질서 구성 움직임의 대립적 공존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그의 정치철학은 문학과 미학 등을 중심으로 인간의 이성적 가능성을 논하던 당대 유럽 지성계에 있어서의 계몽주의적 비평의 작업을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이성의 능력에 의한 정치적 이상의 구성 가능성을 제기하였다(Koselleck 2000) 즉, 칸트의 정치철학은 기독교 도덕 전통의 반발 속에서 인간이 자발적 의지에 근거하여 구성한 세속적 정치질서에 대하여 도덕적 의무의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세속적 정치질서가 갖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칸트 정치철학의 세속적 정치질서의 정당화는 그의 전체적인 실천철학의 기획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그가 도덕철학을 통하여 제시한 인간의 이성적 자기규율로서의 자율성의 개념이 그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칸트의 철학적 의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칸트 실천철학의 전반적인 구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칸트는 그의 실천철학 저작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초』의 서두에서 전통적인 학문의 분류를 통해 자신의 실천철학 또는 윤리학적 작업의

성격을 밝힌다. 칸트에 따르면 철학은 전통적으로 물리학, 윤리학, 논리학의 세 부분으로 나뉘며, 그 중에서 윤리학은 “인간 자유의 법칙”에 대한 연구이다(G, IV:387). 그리고 윤리학은 다시 그것이 다루는 대상이 원리적인지 경험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나뉘 수 있다. 즉, 윤리학의 원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을 “윤리형이상학”과 경험적인 부분을 다루는 “실천적 인간학”으로 구별할 수 있다(G, IV:387). 그리고 칸트에 따르면 『정초』에서 다루어지는 도덕철학이 윤리학의 원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일종에 윤리형이상학적 저작일 수 있지만, “도덕성의 최상 원리의 탐색과 확립”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다른 모든 윤리적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과업”이라 주장한다(G, IV:392). 이러한 언급들은 칸트의 도덕철학이 윤리형이상학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애매하게 만들지만, 여기에서 확실해지는 한 가지는, 칸트가 도덕철학을 통하여 “정초”한 인간의 자유의 법칙으로서의 윤리적 자율성 개념의 토대 위에서 그의 전반적인 실천철학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인간을 초월한 존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이성의 능력에 의하여 스스로에게 법칙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 도덕철학이 가지고 있는 내용상의 풍부함이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상과 같은 정리는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을 것이나, 우리는 이를 통해 칸트 도덕철학이 정초한 실천적 사유의 인본주의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초』를 중심으로 칸트 도덕철학의 핵심적 특성을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칸트는 도덕성의 최상의 원리로서 “윤리적 자율성”[ethical autonomy], 즉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적 능력에 의하여 스스로를 도덕법칙에 묶는 상태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칸트의 사유는 윤리적 원리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의 윤리적인 실천에 있어서의 “질료적인 것”[실제적인 것, 나아가 실천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을 모두 배제하는 것이다. 칸트가 “정초”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제시하는 개념인 선의지는 이러한 질료적인 요소가 모두 배제된 “형식적인”[어떠한 질료적인 고려도 배제된] 윤리적 실천의 의지이다(G, VI:393-396) 이러한 선의지의 개념은 곧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필연적 행위”로서의 도덕적 의무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곧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의지의 보편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도덕법칙”을 도출하도록 한다(G, IV:400-401). 둘째, 칸트는 인간의 윤리적 자율성, 즉 도덕법칙의 획득과 그를 통한 자기규제의 가능성이 인간의 자유로운 능력으로서의 이성[실천이성 *praktischen Vernunft*, 또는 의지 *Wille*]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자연 또는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것이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G, IV:395; IUH, VIII:19; WE, VIII:42; TP, VIII:367).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성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그의 언급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칸트의 주장 또는 믿음 그 자체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성[*Vernunft*]은 인간이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능력이다(G, IV:395). 인간은 이러한 이성을 통해 객관적인 법칙을 표상[*Vorstellung*]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상된 법칙의 표상에 맞게 행위하도록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다(G, IV:412-402, 412, 417; KprV, V:15-16). 이상과 같이 칸트가 도덕철학을 통해 “정초”한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근거한 윤리적 자율성의 관념은, 인간이 도덕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더 이상 기독교 신앙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의무는 신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인간의 고유한 능력에 의해 표상된다.⁷⁾

칸트가 도덕철학을 통해 수립한 자율성의 개념은 곧 인간이 고유한 이성의 능력에 토대하여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정당한 원리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반대로 칸트의 실천적 사유로서의 정치철학은 이러한 도덕철학적 원리가 ‘정치적’ 현실에서 실천될 수 있

7) 칸트의 “윤리적 자율성”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칸트가 이 개념을 통해 인간이 도덕법칙을 직접적으로 “입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드에 따르면 칸트가 도덕철학에서 “*autos*”[自]와 “*nomos*”[律의 두 단어의 합성으로서 “자율성”[autonomy]의 개념을 제시할 때, 그의 방점은 후자인 “*nomos*”에 있다. 즉, 칸트의 사유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volition]는 본질적으로 규범적이지만, 그것이 곧 규범을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Wood 2008, 106-15). 칸트 실천철학에 있어서 인간이 법칙을 입법하는 것은 실증법의 차원에서만 허용되며, 이것은 곧 정치철학의 문제와 관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칸트 정치철학의 가장 성숙한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법이론」은 사회계약적 시민사회 구성을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법”의 관념에 대한 상세한 논의 속에서 확립된 법치적 체계로서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법적질서 수립의 문제를 다룬다. 칸트가 설명하고 있는 법의 관념의 특징을 도덕철학에서의 구상과 대비함으로써, 우리는 그가 이해하고 구상하는 정치적 질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칸트에게 있어서 법은 인간의 실천이성 또는 의지에 근거하여 수립되지만, 이것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에 있어서의 질서의 문제만을 관할한다. 칸트는 「법이론」의 서두에서 도덕철학[“실천이성비판”]의 뒤를 이어 이성의 법칙 수립적 표상 능력을 전제로 하는 “법의 형이상학”에 대한 저술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MM, VI:205). 여기에서 칸트는 “법”[*recht*]을 “그 아래서 어떤 이의 의사가 자유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다른 이의 의사와 합일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라 정의하고 있으며, “행위가 또는 그 행위의 준칙에 따른 각자의 의사의 자유가 보편적 법칙에 따라 어느 누구의 자유와도 공존할 수 있는 각 행위는 법적이다/권리가 있다/정당하다/옳다”[*rechtlich*](MM, VI:231). 이때 논의되는 법은 인간 이성의 법칙수립적 능력에 토대하여 발생하지만, 전체 자유의 법칙의 일부로서 “순전히 외면적 행위들 및 그것들의 합법칙성”에 국한하는 부분만 “법적”이라 지칭할 수 있다(MM, VI:218-219).

둘째, 법은 도덕적 의무가 아닌 다른 동기에 따라 입법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이러한 법적 강제는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적 강제로서 정당성을 갖는다. 오직 도덕적 의무만을 동기로 취하는 도덕과 달리 법은 “의무가 아닌 다른 동기를 허용”한다. 칸트에 따르면 쾌/불쾌와 같은 정념적 요소도 입법의 동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불쾌에 대한 “반경향성[혐오]”이 쾌에 비해 보다 주된 입법의 동기이다. 법은 시민들의 동의에 근거하여 일종의 의무를 형성하며, 칸트는 이것이 일종의 강제의 형식을 그 자체로 정당하고 윤리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법적 차원의 입법은 “외면적인 의무”를 제공하며, 이것이

행위자들의 내적 차원의 의사와 불일치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종의 “강제”를 형성한다(MM, VI:219). 즉, 전체 실천철학의 범위 내에서 따졌을 때, 법은 인간 이성의 법칙수립적 표상능력에 의해 수립되고 또한 윤리적으로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윤리적 체계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그 자체의 법칙수립의 원리적 측면이나 그러한 법칙수립의 결과로 규정한 의무를 인간에게 부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윤리의 차원과 분명한 이질성을 갖는다. 그리고 법은 그 자체로 강제성을 갖는 체계이지만, 법은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는 강제라는 점에서 정당하다(MM, VI:231).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은 “어느 누구의 자유와도 화합하는 전반적이고 교호적인 강제의 가능성으로서 표상될 수 있다”(MM, VI:232). 즉,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법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토대로 다양한 동기에 의해 수립된 외적 행위에 있어서의 의무의 체계이며, 이것은 법적 의무의 당사자인 인간들이 각자의 의사를 모두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립하여 그러한 의무에 스스로 묶인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자율성의 요소이다.

그리고 칸트의 실천철학 체계 속에서 이상과 같은 법적 질서를 확정하는 것[*definitivartike*]이 바로 “공법”[*öffentliches Recht*]의 입법이며 이러한 공법 체계의 기본단위이자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Staat*]이다(PP, VIII:348-353; MM, VI:306-311). 이러한 공법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절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국가를 법체계로 이해할 때 이것이 칸트의 실천철학의 구도 속에서 드러내는 특성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칸트의 실천철학의 차원에 있어서 공법은 자연상태와 시민사회를 구별하는 근거이다. 칸트에 따르면 “법적 상태는 그 아래에서만 각자 자기의 권리를 나눠 갖게 되는 조건들을 함유하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이다(MM, VI:306). 칸트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도 “사법”[*Privatrecht*]은 기능하여 인간이 소유의 기본적인 차원으로서의 점유를 허용한다. 칸트에게 있어서 사법의 핵심은 바로 이 “소유권”[“외적인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갖는 방식”]의 개념을 규명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대상을 나의 것으로 갖

는 것을 의미하는 경험적 점유는, 인간이 국가의 입법 이전에도 갖는 일종의 자연법적 권리이다(MM, VI:245-257) 그러나 자연상태에서의 소유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일 뿐인데[*provisorisch*], 왜냐하면 이러한 소유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MM, VI:257) 특히 인간의 실질적인 삶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서로 인접해 있음의 관계”는 외적 사물의 소유의 문제를 둘러싼 외적 “폭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자연상태를 벗어나 분배적 정의의 상태로 넘어가야 한다는 요청이 나타난다(MM, VI:307). 이에 따라 “법적 상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일반적 공포를 필요로 하는 법칙들의 총체”인 “공법”이 제정되며, 이러한 공법이 수립 이후의 상태를 칸트는 시민사회[“시민적 상태”]라 부른다(MM, VI:311). 그리고 도덕적 의무가 아닌 반목과 폭력이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법된 국가는 그 자체는 도덕적 의무를 수립하는 기능은 없으나, 시민들은 각자가 국가의 입법에 보편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전제 하에 국가에서 수립한 정당한 법적 의무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의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국가의 입법은 자연상태의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신에게 속하는 법적 권리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게 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적 자율성을 획득하는 절차이다. 나아가 이러한 국가의 정당한 입법을 통해 형성된 국가의 법적 강제 역시도 칸트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적 강제는 그 자체로서 도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인간의 실제적 삶에서 필요한 것을 의무로 강제하는 하나의 법칙수립적 이성의 작용의 결과물이다. 사유로서의 정치철학은, 도덕철학에서 정초된 윤리적 자율성의 구성원리를 정치적 차원의 문제에 적용하여 인간의 외적 행위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독립적인 실천적 사유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칸트 정치철학의 전반적인 논의의 구도를 살펴보았다. 칸트의 정치철학은 정치를 도덕적 원리를 실천하는 영역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정치의 영역은 도덕철학적 원리의 단순 적용을 넘어 도덕적 의무가 아닌 것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법적 의무로 입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정치적 사유에는 칸트가 도덕철학에서 구상한 인간의 자유로운 능력으로서의 이성과 이를 토대로 인간이 스스로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자율성의 원리가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의 보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세속적 정치질서의 원리는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갖게 되는 한편, 현실의 정치공동체는 이러한 원리적 기준에 부합할 때에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상과 같은 칸트 정치철학의 논의는 근대 초기 정치사상의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사회계약적 사유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라일리는 칸트를 “적절한 계약론자”[appropriate contractarianism]라 명명한다. 칸트 이전의 사회계약론이 시민들의 자발성에 토대한 사회계약의 결과 발생하는 법적 강제 또는 정치적 의무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던 가운데, 칸트는 자율성[autonomy]의 관념을 사회계약의 설명에 포함함으로써 정치공동체 내에 발생하는 정치적 의무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칸트의 공적이다(Riley 1999).

2. 정치공동체의 구성 원리와 정치적 진보

이 절에서는 칸트 정치철학에서 드러나는 정치공동체 구성의 원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칸트가 이해하고 구상했던 정치적 질서의 성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칸트 정치철학의 핵심주장은 인간이 이성의 능력에 근거하여 보편적인 정치적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때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이성을 수여받았다는 목적론적 설명은 이러한 정치적 차원에서 구성된 질서의 보편화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적 질서는 곧 법적 질서이며, 국가는 법적 질서를 확정적으로 만드는 공법 질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칸트는 국가를 시민 일반과 통치자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으며, 시민은 정치의 틀을 결정짓는 입법권을 갖되 그 외의 측면에 대해서는 국

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를 갖고, 반면 통치자는 헌법에 반영된 시민들의 보편의지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국가에 의해 수립된 정치적 질서는 칸트가 보다 이상적인 정치적 조건을 구상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1) 자연과 인간 이성

우리는 앞선 칸트 정치철학의 기본구도에 대한 논의 속에서, 법적 체계로서의 정치공동체의 구성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 근거가 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이 무질서와 상호 반목의 상태를 극복하고 법적 상태로 나아가는 정치적 발전은 이성의 능력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칸트의 논의 속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자율적인 정치적 질서 구성의 원리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목적론적 관점”[teleological view]도 눈에 띈다. 칸트는 특히 인간의 정치적·제도적 발전을 역사적 차원에서 설명할 때에 이러한 목적론적 관점을 통하여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론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발전이 “위대한 예술가 자연”[*natura daedala rerum*]이 예정한 목적적 계획[a purposive plan]에 따르는 것이며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서의 이성은 자연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적 소질[natural predisposition]이다(PP, VIII:361; IUH, VIII:18; WE, VIII:42). 이러한 설명에서 자연 및 자연이 의도한 목적론에 대한 논의는 일종의 이신론적[deism] 성격을 보인다. 『제1비판』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이신론은 자연을 “모든 것의 뿌리이자, 원초적 존재 또는 세계의 제1원인”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신론은 “근원존재자의 현존을 순전한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되, 그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곧 모든 실재성을 가지고, 그 실재성을 더 자세히는 규정할 수 없는 그런 한 존재자에 대한 것”이다(KrV A:631/B:65; Wood 1991). 칸트가 이와 같이 자연의 개념을 정치적 구상에 개입시켰을 때, 이것은 세속적 정치질서 구성이라는 칸트 정치철학의 주된 정신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이것은 목적론적 사유를 거

부했던 칸트 도덕철학의 윤리적 자율성의 원리라도 모순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칸트가 인간의 정치적 질서의 구성을 자연 또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일정한 초월적 존재를 상정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그 의도와 효과는 무엇인가?

목적론적 사유를 중심으로 인간의 정치적 발전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보편사」에서 나타나는 칸트의 언급들은 칸트의 정치철학 속에 설정되어 있는 인간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킨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보편적 자연법칙에 따라서 결정되며, 개인이나 전체 인민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반대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자연의 의도를 촉진하고 있다(IUH, VIII:17). 칸트에 따르면 지난 간 역사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합리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정치적 가능성을 읽어 내려는 철학자는 “인간 행위의 부조리한 경로 뒤의 자연의 목적을 발견하고자 시도”해야만 한다(IUH, VIII:18). 칸트의 추상화된 역사 속에서 자연은 만물을 창조한 존재로서, 자연은 불필요한 기관은 만들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그 목적에 적합한 자연적 소질을 부여하는 존재이다(IUH, VIII:18). 자연은 나아가 인간도 창조하고 “반사회적 사회성”이라는 독특한 소질을 부여했다. 이러한 소질은 사회적 삶에 대한 욕구와 개인으로 남고 싶은 욕구를 인간이 동시에 갖도록 하여, 시민사회 수립 이전인 초기적 형태의 사회적 삶에 머물고 있는 인간이 상호 간에 반목[antagonism] 상태에 들게 만든다. 여기에서 칸트는 인간 간의 반목 역시도 자연이 의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자연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핵심적인 소질인 이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한 것이라 주장한다. 인간은 이러한 반목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연이 인류에게 부여한 최상의 목적인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이를 “법”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IUH, VIII:20-22) 칸트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여된 자연의 숨겨진 계획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며, 바로 이러한 자연의 계획에 의하여 인간은 먼 미래에 보편적 시민적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IUH, VIII:27-29). 이러한 「보편사」에서의 칸트의 목적론적 설명은

다른 정치철학적 저작 속에서도 발견된다. 「영구평화론」의 보충항에 따르면 자연은 1) 인간이 지구상의 어떤 곳이든 살 수 있게 만들었고, 2) 전쟁을 통해 인류를 모든 방향으로 몰아갔으며, 3) 전쟁을 통해 인류가 상호 간에 법적 관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다(PP, VIII:363). 「계몽」에서는 “단단한 껍질”[hard casing]로서의 국가의 법적 질서 속에서 인민들의 행위의 자유의 씨앗을 계발시키는 존재로서 자연이 언급된다(WE, VIII:42) 이와 같이 인간의 정치적 발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칸트는 자연과 목적론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칸트의 사유 속에서 인간의 정치적 발전을 포함한 모든 행위는 보편적 자연법칙의 속에 속하는 것인가? 과연 정치적 발전의 과정 속에서 인간 이성의 자율성은 어떻게 발휘되고 있으며, 이것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우드에 따르면 「보편사」의 목적론은 인류 역사를 경험적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한편, 이성적 탐구가 역사 속에서 일종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드가 보기에 칸트는 예지계의 초월적 자유 원인을 전제함으로써 역사 내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주장을 한 것이고, 동시에 현상계 내의 인간의 행위는 자연적 필연성의 영향 하에 있다(Wood 2006). 우리는 이러한 측면을 「영구평화론」에서 칸트가 “운명”, “섭리”의 두 개념과의 대비 속에서 자연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운명[fate]은 그 작용의 법칙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강제적인 힘이다. 섭리[Providence]는 더 높은 원인의 지혜에 의해 인류와 세계의 사건이 나아가게 될 방향으로서의 계획으로, 이것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알 수는 없다. 이러한 개념들과 달리 자연은 인간이성의 한계 밖에 있지만, 인간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섭리보다도 “겸손한” 개념이다(PP, VIII:363). 칸트는 인간의 역사적 발전의 필연성을 자연 개념에 토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인류가 스스로의 행위와 그 결과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자연의 법칙에 토대 위에서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 개념의 이해를 토대로 그것이 인간에게 부여한 소질로서 이성적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수 있다. 다시 「보편사」로 돌아가 보면, 칸트는 자연이 인간에게 이성의 능력과 의지의 자유를 부여했다고 말한다. 인간이 본능이나 선천적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의도한 바를 보여준다. 인간은 자연이 부여한 본성상 동물적 존재 방식을 넘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오직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특정한 행위나 완성을 추구하게 되었다(IUH, VIII:19). 이와 같은 역사적 차원에 대한 논의에서 제시된 인간 자유로운 이성에 대한 사유는 그가 도덕철학의 단계에서 전통적인 목적론을 거부할 때 제시한 이성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전술했듯, 『정초』에서 인간의 이성은 곧 인간이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능력이다(G, IV:395). 엘리스에 따르면 칸트가 역사적 논의에 있어서 제시한 강한 목적론적 가정은 오히려 자유롭게 의지하는 인간의 상을 정치적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다루게 되는 효과를 갖고 있다(Ellis 2005, 99). 「보편사」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독특한 본성적 소질을 부여했을 뿐, 인간을 특정한 방향으로 직접 이끌거나 그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발전의 상을 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인간은 ‘반사회적 사회성’의 소질에 의하여 사회생활을 하되 근본적인 상호 반목의 상태에 머물게 됨으로써 본질적인 소질인 “이성”이 발휘하게 되며, 이러한 소질의 발현을 통해 인간은 시민사회의 수립으로 나아간다. 「보편사」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칸트의 목적론적 역사관은 「법이론」의 법학적 논의에서 다루어진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확정된 법적 질서로서의 공법의 입법으로 나아가는 비역사적 원리를 역사적 차원에서 서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 칸트의 자연개념에 근거한 목적론적 설명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근거한 정치적 질서의 수립을 역사적 차원에서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칸트의 정치철학이 인간의 이성 또는 의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것이 실제

의 역사적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외적 행위 및 제도와 관련한 일정한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자유로운 이성 또는 의지의 개념을 토대로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2) 국가의 공화주의적 입법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곧 시민들의 보편적 의지에 의해 스스로에게 부과한 확립된 법적 질서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국가[*Staat*]는 정치공동체의 기본 단위로서 이는 하나의 헌법[*Konstitution*]에 근거한 시민들의 상호관계이자, “법법칙들 아래에서의 다수 인간들의 하나됨”이다(MM, VI:311, 313), 이러한 국가 또는 헌법의 입법은 칸트 정치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연적 소질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과정의 일부이자, 시민들의 권리를 확보하여 자연상태의 상호 반목 및 폭력을 방지하고, 나아가 보다 보편적인 법적 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핵심적인 단계이다. 우리가 이 절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국가의 입법 그 자체의 특성이다. 립스틴은 칸트의 사유 체계 속에서 공법제도를 “비도구적”[*noninstrumental*]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Ripstein 2009, 9). 칸트에게 있어서 국가의 입법 또는 공법제도의 수립은 별도의 편의나 도덕적 의무를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다. 립스틴에 따르면 칸트가 구상하는 공법의 입법은 인간이 자기 자신 주인이 되기 위하여 타인에게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행위 그 자체이다. 그리고 칸트의 공법적 질서의 비도구성을 이해할 때에만, 그가 주장하는 국가의 강제력의 정당한 사용을 하나의 독립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Ripstein 2009, 8-9). 이러한 립스틴의 지적은 칸트가 국가의 입법을 논의할 때, 그것을 통해 도달하게 될 별도의 목적에 대한 고려가 아닌, 국가 자체의 입법의 필연성 또는 국가의 필연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미 “법이론”에서 소유권의 확립이라는 점에 있어서의 공법의 입법이 갖는 필연성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있

지만, 이 절에서는 이러한 입법과 관련하여 비교적 덜 법적이고 더 정치적인 차원에 초점을 두어 살펴볼 것이다. 즉, 이 절에서는 칸트 정치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민들의 동의에 의한 국가의 입법 과정에 초점을 두어, 이것이 어떠한 원리에 근거를 두어 어떠한 형태의 입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칸트에 따르면 국가 수립의 바람직한 형태는 “공화주의적 헌법”[republican constitution]의 입법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공화주의는 통치의 형식에 있어서 입법권과 통치권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전제정과 대비된다(PP, VIII:351-352; MM, VI:316). 칸트는 국민[Volk]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보편적인 동의에 의해서 국가를 구성하되, 통치권은 별도의 통치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역할상의 분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헌법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동의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칸트는 「법이론」에서 이러한 공화주의적 입법의 요소를 보다 상술하고 있는데, 입법권은 “오직 국민[Volks]의 합일된 의지에만 귀속”하며, “모든 이가 각자에 관해 동일한 것을 결정하는 한에서, 그러니까 오직 보편적으로 합일된 국민의 지만이 법칙수립적일 수 있다”(MM, VI:313-314). 반면 통치권은 일반 인민이 아닌 통치자[Regent]에게 주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법률에 따라 강제하는 능력이 최상위에 가서는 이 통치권[집행권]에 귀속”된다(MM, VI:316-317). 나아가 칸트는 입법권과 통치권에 분리하여 재판권을 통치자가 임명한 판관에게 귀속시키기도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칸트가 국가의 수립을 인민의 보편적 동의[“합일된 의지”]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하되, 이것이 “헌법” 즉 “서로 간에 교호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법적인 것을 분유(分有)하기 위한”, “법적 상태” 그 자체라는 점이다(MM, VI:311). 국가 수립의 단계에서 인민이 입법을 하는 대상은 구체적인 법률이 아닌 법적 질서의 형식이며. 이러한 형식적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법률을 입법하는 권한이 통치자[Regent]의 집행권에 귀속된다.

물론 이러한 국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가 설정하고 있는

자연상태, 즉 공법의 입법 이전의 상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보편사」에서 칸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동시에 상호 반목을 겪으면서, 이성의 능력에 의해 시민적 상태로 나아감을 주장했다(IUH). 이러한 일종의 자연상태에 대한 논의는 칸트가 “법이론”의 사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매우 상세히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사법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공법과 공법의 근거로서의 헌법을 구성하는 정당한 근거를 밝히기 위함이다(MM). 사법은 “나의 것”의 관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이것은 “소유권” 나아가 “권리” 문제로 연결이 된다. 칸트에 따르면 공법의 수립은 모든 시민의 의지에 의하여, 이러한 권리를 “나누어가짐”을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칸트에게 있어서 공화주의적 원리는 국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들의 보편적인 동의에 의한 헌법의 입법에 의해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국가 속에서 통치자와 일반 시민의 분업이 일어난다. 칸트가 통치자와 일반 국민이 구분되기 이전에 이들은 동등한 시민이며, 이들에게는 일종의 동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점이다(MM, VI:307). 그리고 공법의 입법은 이러한 차원에서 시민들이 자연상태에서부터 공유하고 있던 동등한 입법권에 근거한다.

그리고 칸트는 자유[freedom], 평등[equality], 독립[independence]의 세 가지의 선험적 원리가 이상과 같은 국가 또는 헌법의 법적 질서에 근거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세 원리에 대한 언급이 칸트의 정치철학적 논의 속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이론과 실천」은 이러한 원칙들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TP, VIII:290-296; MM, VI:314). (1) “인간으로서의 자유”는 누구도 인간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결정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누군가가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유의 원칙이 국가의 입법에 반영된다는 것은, 국가가 그 시민에게 특정한 행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그가 자신만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적인 법적 틀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어진다. (2) “주체로서의 평등”은 입법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이 통치자만을 제외하고 반드시 입법자로서 평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종의 기회적 평등의 주장으로 이어져 국가

의 모든 구성원은 재능, 근면, 행운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국가 내의 모든 계급에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반면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통치자가 일반적인 시민과는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한다. (3) “시민 또는 국가의 공동입법자로서의 독립”은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에 의해 입법의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반영하여 모든 법률들의 입법 근거로서의 원초적 계약[original contract]으로서의 헌법을 구성하게 한다(TP, VIII:289-296).

칸트는 이와 같은 국가의 입법을 일종의 “원초적 계약”이라고 보고, 국가에서 그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모든 의무와 법률의 수립이 이러한 근거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TP, VIII:297; PP, VIII:350-351) 물론 이러한 국가 입법의 원리는 실제로 시민들이 보편적인 의견을 모아 연합을 구성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국가의 입법의 원리에 대한 고려는 단순한 이성의 이념이다(TP, VIII:297). 즉, 이는 국가에 대한 사실적 물음[*quid facti*]보다는 법적 물음[*quid juris*]에 가깝다. 카시러는 이러한 칸트 정치철학의 법적 물음으로서의 성격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원초적 계약의 개념에 근거한 법적 물음의 특징은 이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를 국가 입법의 주체로 여기도록 하는 한편 국가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Cassirer 1963, 34-35) 즉, 이러한 원초적 계약의 관념은 국가의 구성원들이 실제의 국가 속에서 고려해야 할 특정한 의무를 발생시키며 칸트의 이러한 국가의 입법에 관련한 정치철학적 논의는 곧 현실의 국가가 가져야 할 원리적인 성격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서 이야기해볼 수 있다.

첫째, 시민은 국가의 통치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 시민들은 원칙적으로 입법권을 갖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틀, 즉 헌법이나 대의제 정부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권리이며, 국가 또는 대의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의무이다. 시민은 국가의 구성원리에 대해서 탐구하거나 이를 변설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법적 질서는 그것을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그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치자는 법적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국가에 대하여 불법적 측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MM, VI:319) 시민은 통치자에 대해 저항이 허용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시민이 복종함으로써만 법적 질서가 유지가 되고, 또한 시민들에게는 통치자의 행위가 위법적인가를 판단할 사법권이 부재하기 때문이다(MM, VI:320). 또한 시민들은 통치자의 방침이 자신의 의사와 다르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통치자의 통치권은 전체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시민들의 목적을 배제해야 한다는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성립하였기 때문이다. (TP, VIII:299) 국가의 체제 변경은 국민의 혁명이 아닌 통치자에 의한 개혁을 통해 가능하며, 이것은 입법권이 아닌 통치권의 문제이다(MM, VI:322).

둘째, 통치자 역시도 이러한 원초적 계약으로서의 헌법에 영향을 받는다. 대의제 대표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통치자는 헌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통치권을 가지며,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통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민들에게 강제력을 발휘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원초적 계약으로서의 헌법은 통치자에게도 의무를 부여하는데, 통치자는 “모든 인민의 통합된 의지로부터, 시민이고자 하는 모든 주체들에 대한 고려 속에서 떠올랐음직한 것들을” 법률로 입법해야만 한다(TP, VIII:297). 물론 이러한 공화주의적 토대 위에 대의제를 수립한다면 시민들의 통합된 의지는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자에게 반영될 것이다(PP, VIII:352-353; MM, VI:340-342).

칸트는 현실의 국가에 대해 사유하는 한편, 원초적 계약으로서 시민들의 보편적 의지의 통합에 의한 국가의 입법이라는 원리를 구상한다. 이러한 원초적 계약의 관념은 국가를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 구성된 법적 질서로 받아들이면서 일반 시민은 물론 국가의 통치권력이 따라야 할 일정한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칸트의 정치적 영역에 대한 이해 또는 구상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그 국민들에 대해서 발휘하는 강제력의 현실적 측면이다. 현실 속에서 통치자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강제력을 가진 법적 명령을 내린

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며, 이러한 현실적인 차원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리적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를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 구성된 법적 질서로서 이해하는 원리적 측면이다. 칸트는 국가를 하나의 법적 질서로 조망함으로써 국가의 강제와 국민의 복종의 두 측면을 하나의 정당한 관계로서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했다. 셋째, 국가의 강제력이 인민들의 보편적 동의에 근거해있음을 밝힘으로써 현실 국가의 통치방식에 대하여 변화를 유도하는 규범적 측면이다. 칸트는 원초적 계약의 이념을 통해 국가의 통치권의 근원이 국가 수립 단계의 국민들의 보편적 동의에 근거해 있음을 전제하게 될 때, 국가는 “유일하게 적법한 체제”인 “순수 공화국의 체제에 그 작용결과 면에서 합치”하게 되며, “순전히 국민의 신민성[공순함]만을 낳는 데 기여한 저 오래된 경험적인[제정법규적인] 형식들을 근원적[합리적]인 형식으로 해체할, 구성적인 권력의 책무성”이 발생하게 된다(MM, VI:340). 정리하면, 칸트 정치철학에 있어서 국가의 공화주의적 입법의 구상은 세속적 정치 질서를 원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동시에,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여 현실의 통치권력에 책무성을 부여하는 규범적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

3) 정치적 희망: 영구평화와 시민의 정치적 자율성

이어서 칸트의 정치철학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이상의 측면에 대하여 다루어본다. 우리는 앞선 절에서 칸트의 정치철학이 현실의 국가에 대한 현실적, 원리적, 규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절은 정치의 현실/원리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 칸트의 정치적 희망의 차원을 간략히 정리한다. 칸트가 정치철학적 사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상적인 주장은 두 가지이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공법질서가 확장되어 보편적인 세계평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보편사」, 「영구평화론」, 그리고 「법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이다. 두 번째는 「계몽」에서의 국가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계몽에 대한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적 사유에서 공화주의는 중요

한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칸트의 체계 속에서 공화주의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자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로 생각된다. 따라서 칸트의 정치적 희망에 대한 본 절의 해석은 칸트의 정치에 대한 이해는 물론, 공화주의에 대한 그의 입장을 해석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첫째, 칸트의 정치철학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공법체계로서의 국가의 수립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하고 있지만, 그는 이러한 사유를 최종적으로 전 세계적 차원의 보편적인 평화의 논의로 확장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보편사」는 칸트의 정치철학적 기획을 목적론적인 역사의 틀 속에서 설명하면서, 자연상태에서 국가를 수립하고 나아가 시행착오의 끝에 인류의 완전한 시민적 연합[perfect civic union of the human species]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보여주는 저작이다. 「영구평화론」에서는 국내적 차원의 공화주의적 헌법이 보편적 평화를 가져오는 데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논의의 출발은 공화주의적 헌법을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더 평화를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에서 시작한다. 특히 입법권을 가진 시민들이 대표자[*Deputierte*]를 투표에 의해 직접 선출하는 대의제[*Repräsentativsystem*]는 공화주의적 헌법을 전제로 했을 때만 성립 가능하며, 이것은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PP, VIII:352-353). 칸트에 따르면 공화정, 나아가 대의제를 수립한 국가는 전쟁을 수행할지의 여부를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결정하기 어려우며, 시민들이 전쟁이 가져올 고난에 대한 우려로 전쟁을 반대하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제정이 수립된 국가에서는 통치자만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신민이 전쟁으로 겪게 될 문제에 관계없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PP, VIII:351) 칸트는 국가와 민족을 개인처럼 볼 때 이들이 상호 간에 자연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간의 연맹체[federation]를 구성하고 국제법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연맹체여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국가들의 국가가 될 경우, 그 내부에 입법자로서의 상급자와 일반 민족으로서의

하급자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PP, VIII:354). 이와 같은 국내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으로의 공법질서를 확장적으로 논의하면서 세계 평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법이론”에서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보편적 평화에 대한 구상 속에서 칸트가 사유한 공화주의의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난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공화정을 곧 시민들의 보편적인 의지가 반영되는 국가체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화주의 국가는 전쟁의 고난을 기피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전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법이론」의 국제법 중 “전쟁으로의 권리”[right to war]를 논하는 부분에서도 나타나는데, 전쟁으로의 권한은 국제법상 개별국가의 고유의 자유이지만, 이것은 국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직접적으로 구해야 하는 문제이다(MM, VI:343, 345-346). 나아가 칸트는 「법이론」의 결론부에서 도덕적-실천적 이성의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 반전(反戰)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 그의 법적 논의의 목적이었음을 말한다(MM, VI:355). 여기에서 칸트는 공화제에 기반한 보편적인 공법질서의 확립이 인간의 평화를 추구하는 도덕적 원칙이 실제의 정치적 영역에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을 보여준다.

둘째, 칸트의 「계몽」은 국가라는 하나의 정치적 제도 속에서 계몽[Aufklärung, enlightenment]을 통해 시민들이 자율적인 존재로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상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능력이 없는 미성숙”의 상태에 있다(WE, VIII:35). 그리고 계몽은 이러한 미성숙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계몽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자유이다. 즉, 이성의 공적 사용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허용이 될 때 시민들의 계몽이 가능하나, 현실의 조건은 규율에 대한 복종만을 강요할 뿐 비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칸트는 이러한 측면에서 프레데릭의 치세를 “계몽의 시대”[an age of enlightenment]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계몽된 시대”[the enlightened age]이 오기 위한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본다(WE, VIII:42). 여기에서 프레데릭의 치세의 특징은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한 공적 안

보의 확보의 토대 위에 비판의 자유를 최대로 허용하는 것이다. “원하는 만큼 원하는 어떤 것에 관해서든 논쟁하라, 그러나 복종하라!”는 표어는 이러한 프레데릭의 치세가 갖는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칸트는 이러한 “단단한 껍질”[hard casing] 속에서 제한된 “시민의 자유”[civic freedom]를 전제로 “지적 자유”[intellectual freedom]를 보장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행위의 자유[freedom of action]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주장한다(WE, VIII:42).

칸트는 「계몽」에서의 당대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critique]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내용에서 해당 저술이 출간된 1784년 당시의 프로이센의 현실에 대한 그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현실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이러한 자유의 조건을 성숙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칸트의 사유가 담겨 있다. 당대의 프레데릭 2세의 치세는 제도적으로는 군주제였지만, 「영구평화론」에서 칸트는 프레데릭 2세가 스스로 시민의 종복을 자처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의제의 정신”과 합치한다고 본다(PP, VIII:352). 여기에서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은 과연 “프레데릭의 치세” 또는 “대의제의 정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련하여 “계몽”으로부터 눈에 띄는 한 구절은 칸트가 시민의 자유와 지적 자유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칸트는 시민의 자유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외적 행위의 관계’의 차원에서 완전히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내적 사유의 차원’에서 지적 자유가 허용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아직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미성숙한 상태의 시민들이 보다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칸트가 「법이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국가의 통치권과 시민들의 입법권의 공화주의적 분업과의 연관성 속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군주제 하에서는 시민들이 통치자를 직접 선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적 자유의 제한을 받게 되어있으나, 오히려 프레데릭 2세의 비판의 자유 허용은 시민들이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은 지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계몽의 시대”라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칸트의 정치적 희망에 대한 논의는 그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사유의 일면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칸트가 공화주의적으로 구성된 국가와 그에 토대한 정치적 질서 속에서 인간이 중대한 도덕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화주의적 국가는 지구상의 제국(諸國)들 간의 보편적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질서 구성의 기본적 단위이며, 나아가 개별적인 시민들이 완전한 자율성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토대이다. 엘리스는 공공성[publicity]의 개념에 초점을 두으로써 칸트의 정치철학에 내포되어 있는 역동적인 정치적 발전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Ellis 2005). 칸트 정치철학에 있어서 공화주의적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정치질서의 구성은 인간의 본성상 그 자체로서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나아가 이것은 인간이 본연의 도덕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상태로서의 궁극적인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희망은 오직 인간의 실천이성 혹은 자유로운 의지에 근거해서 형성되며, 이러한 정치적 차원의 보편적 질서를 수립하는 칸트의 정치철학적 사유에 있어서 종교적 요소의 개입은 제한된다.

3. 칸트 정치철학의 종교적 함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칸트 정치철학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법적 질서에 대한 사유이다. 칸트에게 정치적 질서는 곧 법적 질서이며, 이는 곧 인간의 외적 행위의 관계에 대한 의무와 관련이 있다. 칸트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사유에서 핵심적인 단위인 국가는 시민들이 보편적 동의를 통해 입법한 결과물로서의 헌법으로 이는 곧 법적 질서를 확립하는 공법 체계의 일부이자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칸트의 원리적인 사유는 현실 속에서 통치자가 시민에게 강제를 부여하는 강제적 관계를, 헌법에 근거하여 통치자와 시민이 상호 간에 의무를 갖는 보다 도덕적인 체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나아가 칸트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통치자와 시민의 관계를, 시민이 통치자를 직접 선출하는 공화주의-대의제

로 구성할 때, 시민의 국가에 대한 복종에 의해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되면서도 시민들의 의지가 곧 정치영역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원칙에 근거한 정치적 희망이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칸트의 정치적 희망은 공법 질서가 보편화됨으로써 인류 전체의 평화가 가능하고, 그 속에서 개별적인 시민들이 보다 자율적인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칸트의 정치철학은 인간이 신이나 종교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도덕적-법적 의무를 형성하고, 전 세계적 차원의 질서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세속적 정치질서를 정당화하는 작업이다.

인간의 외적 행위의 질서를 주로 논하는 칸트의 정치철학은 그 특성상 종교적인 차원에 대해서 언급이 제한적이며, 언급하더라도 현실의 교회나 기독교의 특정한 경향에 대한 외면적인 비판이 주를 이룬다. 특히 현실의 교회 조직은 칸트의 정치철학에서 국가의 정치적 질서에 포섭되어 있다. 국가의 법적 제도를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는 「법이론」의 “공법”에서도 종교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칸트는 “전적으로 시민적 권력의 작용권 밖에 있는 내적 마음씨인 종교”와 구별되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예배를 위한 기구인 교회기관”을 구별하면서 후자에 대해서만 국가의 법적 권한이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갖는 권한은 교회의 신앙의 방식 자체를 결정하는 적극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평안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공적인 교사들[성직자들]의 가시적인, 정치적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억지하는 소극적 권리”를 의미한다. 즉, 교회가 내부적 갈등으로 상호 간에 충돌을 일으키거나 시민들의 단결을 해치는 경우, 경찰이 나서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내적인 차원, 즉 믿음의 방식이나 내적 개혁의 움직임은 국가의 관할 밖이며, 여기에 대하여 강제를 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기관의 유지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는 없으며, 오직 그 종교를 갖고 있는 교단과 회중만이 이러한 비용의 부담을 갖는다(MM, VI:327-328). 그리고 “교회라고 부르는 성직자 단체”가 취하고 있는 국가 내의 독점적인 토지 이용이 국가의 결정에 따라 그

법규가 폐기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토지 소유권의 최종적인 근거가 주권자에 있다는 전제 하에 애초에 교회가 이러한 토지의 독점적 사용권을 갖게 된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공적 의견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민의”가 사라지면 교회는 그러한 토지의 소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MM, VI:323-325).

칸트는 기독교 신앙이 현실의 정치공동체 내의 공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 속에서 후자가 전자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칸트의 당대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계몽」에서 그가 시민들의 미성숙과 그것의 극복에 대하여 언급할 때 “종교적인 문제”를 특별히 더 묘사했던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미성숙이 가장 해로운 종류의 것”이기 때문이다(WE, VIII:41). 통치자는 이러한 시민들의 미성숙을 계몽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 안보를 바탕으로 두고 시민들의 이성의 공적 사용과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즉, 칸트에 따르면 종교 역시도 “계몽의 길”을 따라 진전이 되어야 한다. 이는 성직자가 자신의 회당에서 설교나 교리문답을 하는 등에 있어서는 국가당국 또는 교단으로부터의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각 성직자는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학자로서 자신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성직자 모임 또는 교회 총회는 항구적인 종교적 헌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헌법의 제정이 인류의 진보를 방해하고, 다른 이들의 자신의 구원의 방식을 결정하고 촉진시키도록 작업하는 것을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계몽의 시대로서의 프레데릭 [Frederick II]의 치세가 강력한 최상의 권위를 바탕으로 교회 내의 다양한 의견 표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종교 내의 정신적 전제정을 예방할 수 있다(WE, III:37-40). 즉 시민들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토대로서의 국가의 계몽적 기능은, 교회 조직 내의 자율성 역시도 증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발언의 자유와 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칸트의 정치철학적 관심은 주목을 끌며, 이러한 점은 이어지는 장

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칸트는 「법이론」의 후속 논문이라할 수 있는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에 대한 해명적 주해」에서 종교적 질서와 정치적 질서의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정치적 질서가 더 오래 남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칸트는 “시민적 체제”로서 “지상의 권력”이자 “경험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인 국가만이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으며, “그들의 나라가 천상에 그리고 저 세상에 있는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국가의 최고권력에 종속해야 한다. 그리고 “[현상으로서의] 종교는 교회의 종규들에 대한 그리고 사제들의 권위에 대한 믿음”으로 이러한 종교는 어떤 국가시민적 권력에 의해 국민에게 강요될 수 없다(MM, VI:368-369). 이는 칸트가 현실의 종교공동체를 외적 측면에서 정치적 질서 내로 편입하는 한편, 이러한 종교가 국가의 권력에 의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칸트는 현실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교회 자신은 순전히 신앙 위에 건립된 기관으로서, 만약에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착각이 국민계몽에 의해 사라져 버리면, 그 위에 기초하고 있는 성직자들의 권력도 떨어져 나가고, 국가는 완전한 권리고 교회의 참칭된 소유, 곧 유증에 의해 교회에 기부된 토지를 차지한다(MM, VI:368-369).

이는 부분적인 언급에 불과하지만 놀라운 주장을 담고 있다. 칸트는 기독교 교회의 신앙이 “국민계몽”에 의해 사라질 수 있는 “착각”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의 기독교에 대한 칸트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조직이 영원히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세속적 정치질서에 포섭되리라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칸트의 언급은 칸트의 기독교 신앙의 현상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여실히 드러낸다. 정치철학적 구상 속에서 칸트는 정치적 현실 속에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교공동체의 권력은 차차 해체될 것이며, 정치공동체의 법적 질서 속에

완전히 포섭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 자체에 대한 주제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칸트 정치철학의 특성상, 이 절에서는 불가피하게 칸트의 해당저작들에서 나타나는 종교에 대한 짧은 언급들을 선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앞선 절들에서 살펴봤듯 칸트가 정치철학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세속적 질서의 보편화 가능성을 사유했으며, 그러한 연장선 속에서 종교의 적극적인 역할은 축소되고 제한되어야 궁극적으로 세속적 정치질서 속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정치적 질서의 정당화와 보편적 확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통에 근거한 종교적 질서는 부정된다. 이러한 측면은 인간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구성된 정치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특히 공적 영역의 구성을 통하여 시민들의 보편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한하는 정치적 세속주의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자유주의적 입장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해석되고 있다(Bernstein 2009; Habermas 2008; Rawls 2005). 칸트의 정치철학적 저술에 국한하여 살펴봤을 때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칸트를 정치적 세속주의자로 해석하는 것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칸트는 완전한 정치적 세속주의자라 볼 수 있는가? 즉, 칸트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또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의 적극적인 정치적 기능을 완전히 부정했던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칸트를 정치적 세속주의자로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우리는 이러한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칸트의 종교에 대한 주제적인 사유를 담고 있는 종교철학의 저술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칸트 종교철학의 기획과 정치적 함의

칸트의 실천철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의 정신문명의 기축을 이루었던 기독교 전통과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근대적 세계관이 충돌하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다. 특히 사회계약적 전통과 근대국가 구성의 흐름의 영향 하에 있었던 칸트의 정치철학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의해 구성된 세속적 정치질서가 그 자체로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질서의 확장을 통해 보편적인 평화와 자유로운 개인의 육성이라는 희망적인 계획까지 가능하게 함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칸트 정치철학에서 드러나는 세속적 정치질서에 대한 강한 지지도도 불구하고, 칸트는 종교철학을 통하여 반대로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성적 체계 내에 보존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즉, 『종교론』과 「논쟁」을 중심으로 하는 칸트의 종교철학은 종교가 인간의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 필연적인 요소임을 밝힌다. 『종교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재해석하여 이것으로부터 윤리적 실천의 체계로서의 도덕종교의 이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 가지 차원의 의의가 있는데, 첫째, 도덕철학적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인간이 도덕적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둘째, 기독교에 대한 해석의 차원에서, 기독교 내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측면으로서 도덕적 실천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다. 셋째, 현실에서의 도덕적 실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성격을 갖는다. 본 장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칸트의 종교철학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살펴본다.

1. 칸트 종교철학의 구조:

도덕종교의 발견과 기독교 신앙의 재해석

『종교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칸트의 종교철학은 인간이 도덕적

실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왜 종교가 필연적인가를 주장하는 작업으로, 여기에서 칸트는 기독교 전통을 철학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그 본질적인 요소를 이성적 체계 내에 보존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독교의 재해석은 기본적으로 현실의 기독교 신앙과 교단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칸트의 『종교론』은 그 출간 과정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문제를 겪었는데, 우리는 이와 관련한 역사적 맥락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칸트의 종교철학이 당대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종교론』이 저술되고 출간되던 시기인 1790년대 초반 무렵의 프로이센은 새로운 군주의 취임 이후 전반적으로 보수화의 일로에 있었다. 1786년 계몽군주로 칸트의 저술 속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던 프레데릭 2세가 죽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Friedrich Wilhelm II]가 등극하였으며, 이때 역시 새롭게 취임한 법무장관 뵐너의 이름으로 새롭게 종교칙령[Wöllner Edict]이 공표됐다. 이 칙령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내에 신앙의 전통적 교리의 권위를 강제하고, 목회자에게 정통교리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신학적 저술에 대한 검열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당시 『종교론』을 구성하는 네 편의 논문들을 출간하려던 칸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하여 칸트의 종교철학 논문 네 편 중 『종교론』의 1부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간 본성 안의 근본악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베를린월보에 출간될 수 있었고, 그 이듬해에 이르러서야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가 한 권으로 묶어 출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칸트와 국가당국-교회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기독교 교단을 비판하는 「만물의 종말」을 1794년에 출간한 뒤 견책을 받아 종교적 주제에 대해서는 저술과 강의가 금지되기에 이른다(Beck 1969, 434-435).

이러한 검열에 대한 칸트의 반응은 『종교론』의 머리말과 「논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칸트는 자신의 종교적 저술을 “철학적 신학”이라 명명하면서 이러한 학문적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의 강제적 검열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R, VI:8-9; CF, VII:19-20). 이러한 점에서 종교철학은 칸트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철학적 작업이었지만, 현실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정치종교의 전통적 형태 즉 기독교 교단과 프로이센의 국가 당국의 결합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립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종교론』 이후의 종교철학적 저작인 「종말」과 「논쟁」은 국가당국에 의하여 출간이 금지되었던 『종교론』의 2-4권에 해당하는 논문의 주제의식을 발전시켜 기독교 교단의 잘못된 믿음의 방식과 교회 조직과 학문으로서의 신학 내에 상존하는 성직자 권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저술이다. 칸트 종교철학의 단초이자 가장 핵심적인 원리들을 상세하게 전개하고 있는 『종교론』은 그 본연의 목표인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비판적 이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실제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적 종교와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칸트가 도덕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순수한 종교의 관념을 도출해내면서부터 시작된다. 칸트에 따르면 본래 도덕철학은 도덕성의 최상의 원리를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정초』에서부터 제기된 칸트의 고유한 도덕철학은 인간의 자율성[*Autonomie*]의 개념을 원리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윤리적 자율성, 즉 인간이 스스로를 절대적인 도덕법칙에 묶는 것은 인간의 선한 의지[*Wille*] 또는 순수 실천이성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 도덕철학에서는 도덕법칙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목적도 거부하며, 인간을 넘어선 신에 대한 관념이나 신에 대한 신앙에 토대한 전통적인 종교나 신학의 가르침이 토대가 될 필요도 없다(R, VI:3). 그러나 “도대체 우리의 올바른 행위로부터 무엇이 생겨나는가(R, VI:5)?”여기에서 제기하는 칸트의 종교철학적 질문은 도덕법칙에 의거한 인간의 윤리적 행위가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한 것이다. 도덕적 행위가 반드시 그것이 야기한 결과에 있어서도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도덕성의 최상의 원리를 탐구하는 도덕철학의 원리를 통해서만 답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실천을 할 때에는, 자신의 의사[*Willkür*]에 따라 특정한 준칙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사에 의한 준칙을 채택하

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실천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칸트는 “결과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의사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즉, 결과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인간은 실천을 하기 어려우며, 칸트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필요욕구”[the need]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즉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필요욕구가 종교철학적 질문의 출발점이다(KprV A:238-240; R, VI:6).

이때 인간의 필요욕구는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 그 결과가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가를 묻게 되며, 그 결과 인간은 도덕종교의 개념을 도출하게 된다. 인간은 특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덕법칙을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은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야기될 결과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도덕법칙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도덕법칙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선택한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그 근본의도가 선택한 이상 도덕적 실천이 가져올 결과 역시도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중대한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도덕법칙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자 할 때에는, 그의 행위의 의도로서의 도덕법칙이 절대적으로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실천의 결과가 나타낼 결과의 측면 역시도 반드시 선택하는 일종의 ‘보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최고선[höist Gut]의 개념이 제기된다.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고자 할 때, 인간은 “하나의 목적인 무엇에 우리의 행동거지를 지향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하게 되며, 절대적인 도덕법칙에 상응할 수 있는 결과는 곧 “이 세계에서의 최고선”에 대한 객관적인 이념이다(R, VI:5). 즉 인간이 도덕법칙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것이 야기할 결과가 반드시 최고선일 것이라는 점이 보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의 최고선”의 관념은 그것을 보증하기 위한 절대적 존재자로서의 신의 관념을 필요로 한다(R, VI:5). 왜냐하면 인간은 그 이성적 능력에 의하여 절대적인 도덕법칙을 자신의 행위의 준칙으로 채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한계로 인하

여 도덕적 행위가 일으킬 결과까지를 인간이 자신의 이성이나 의지의 능력에 의해 통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는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하나의 보다 높고 도덕적이고, 최고로 신성하며 전능한 존재자”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R, VI:5) 신은 전능한 도덕적 존재자이자 세계의 창조자로서, 도덕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자로서 이러한 신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며, 여기에서 도덕적 실천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윤리적 의무로 성립하게 된다.

순수한 도덕법칙의 실천을 위하여 신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칸트 종교철학의 핵심 개념인 “도덕종교”[*moralische Religion*]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종교철학의 질문은 칸트 철학의 세가지 근본질문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⁸⁾ 즉, ‘무릇 내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한다면, 나는 그때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칸트에 따르면 이 희망에 대한 질문은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에 관련한 “실천적 물음”과, 의무의 실천 이후에 얻게 될 결과에 대한 “사변적 물음”이 동시에 제기된다(KrV, A:805-806/B:833-834). 이러한 점에서 칸트의 종교철학적 관심은 인간이 모든 실천에 있어서 반드시 작동하는 결과를 알고자 하는 자연적 욕구능력에 토대할 때, 바로 도덕적 실천에 수반되는 그 결과 역시도 그 동기인 도덕법칙만큼 선할 것을 희망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결과를 보장하는 신이 존재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⁹⁾ 칸트에 따르면 “은혜간구의 종교”에 대비되는 것이 “도덕

8) 칸트는 자신의 철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의 이성의 모든 관심(즉 사변적 관심 및 실천적 관심)은 다음의 세 물음으로 통합된다. 1.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3.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KrV, A:805/B:833)

9) 도덕철학의 단계에서 윤리적 자율성의 확보를 위해 어떠한 목적에 대한 고려도 배제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종교철학에서의 목적에 대한 고려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칸트는 도덕법칙을 통해 추구하는 것으로의 목적과 도덕법칙의 결과에 대한 고려를 구별한다. 이와 관련하여 칸트는 간단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사고실험을 제시하는데, 여기에서 칸트는 과연 도덕법칙을 존경하는 인물에게 어떠한 세계를 창작할 것인가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그는 어떤 세계를 창작할 것인가의 질문을 던진다. 만일 이러한 사고실험 속의 인물이 진정으로 도덕법칙을 존경하는 인물이라면 그는

종교”의 개념인데, 전자가 신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도덕적 행위가 그 결과에 있어서도 선택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덕적 실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R, VI:52). 이때 중요한 것은 신에게 흡족할만한 도덕성을 스스로 획득하는 일이다. 이러한 도덕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인간 스스로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윤리적 실천의 조건을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종교의 수용은 근본적인 사유방식에 있어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칸트에 따르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선택 인간이 된다는 것”, 또는 인간이 실제로 “예지적 덕”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마음씨[Gesinnung]의 혁명 즉, 마음씨의 신성성의 준칙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이는 윤리적 실천을 방해하는 “기질[경향]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으로 이어진다(R, VI:46).

이러한 점에서 도덕종교는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이며, 도덕적 실천 자체를 의무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도덕적 실천을 하도록 하는 하나의 필연적인 믿음 체계이다. 또한 신의 개념을 이성적 능력에 의한 추론에 의해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종교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곧 이성신앙이자 철학적 신앙이며, 나아가 신에 대한 믿음과 도덕적 실천에 관련한 종교적 관계를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 믿는다는 점에서 순수종교신앙이기도 하다. 그리고 칸트는 기성종교들이 이러한 도덕종교로의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칸트는 기독교의 교회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도덕종교에 의거한 순수종교신앙의 관점에 의해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교회신앙은 순수종교신앙을 최고의 해석자로 갖는다”](R, VI:109-115). 이어지는 절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겠지만, 칸트의 기독교에 대한 도덕종교로서의 해석의 시도는 크게 두 가지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실의 인간이 처해있는 윤리적 결함이 극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그러한 극복이 종교적 차원에서 답해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둘째, 기독교 신앙이 내포하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측면을 밝힘으로써 현실의 기독교 신앙

최고선이라는 도덕적 이념을 동반하는 바로 그러한 세계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R, VI:6).

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칸트 종교철학으로 하여금 현실의 기독교 교회, 나아가 이러한 종교적인 요소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당대의 정치적 현실과 일정한 갈등관계를 형성하도록 한 것이다.

2. “지상에 신의 나라 건설”:

기독교의 재해석과 인간의 도덕적 완성의 원리

그렇다면 칸트의 도덕종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기 위한 칸트의 논의는 왜 기독교 신앙의 해석에 집중하는가? 이것은 칸트가 보기에 기독교 성서가 인간이 악의 상태에서 선한 원리의 획득으로 나아가는 사유의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교회 신앙은 인간이 “부패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아직도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그가 벗어나 선으로의 복귀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R, VI:41-44). 칸트는 기성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이 진정한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각자는 자기의 힘이 미치는 한 최선을 다해 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공해왔기 때문이다(R, VI:52). 나아가 기독교의 토대가 되는 “보편교회”의 이념은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이 윤리적 완성에 이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실천적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R, VI:100-102). 칸트의 종교철학에 있어서 순수한 신앙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종교 내의 형이상학적 요소를 극복하는 한편 도덕종교를 교회의 “전통적 틀”[conventional shell]로부터 발견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특성이지만, 동시에 도덕종교의 적용은 기독교 내의 형이상학적 신학전통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Habermas 2008, 221-223). 이와 같은 칸트의 철학적 신학 또는 기독교의 이성적 해석 작업은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를 이성적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종교로서의 본질적인 요소를 보존하는 것이기도 하다.

1) 인간의 윤리적 현실로서의 근본악

칸트 종교철학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사유로서의 특징은 현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결함에 대한 ‘경험적 이해’로부터 보다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적 이해는 도덕철학의 이념적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도덕철학의 원리적 차원의 논의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점은 칸트의 도덕철학과 종교철학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지적을 가능하게 하지만, 바론 등에 따르면 도덕철학과 종교철학 사이의 괴리는 칸트의 실천철학으로부터 인간의 도덕적 완성의 이론적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Baron 1987; Yovel 1980). 그 이유는 간단한데, 인간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야만 도덕적인 완성을 시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수행하는 주체적인 노력이 의미를 갖게 한다. 칸트의 종교철학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간의 도덕적 완성의 차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본 절에서 다루게 될 현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결함에 대한 칸트의 이해를 살펴본 이후에야 보다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칸트는 “종교론”의 제1논고를 통하여 근본악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출발은 기존의 윤리학적 입장들이 전제하고 있는 품성론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이다. 칸트는 기존의 윤리적 품성론이 인류가 본래 선한 존재였으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타락해가고 있다는 기성 종교신앙들의 종말론적-염세주의적 입장들과(i), 현재에는 도덕적으로 악한 상태에 있는 인류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질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세네카에서 루소로 이어지는 “영웅적[낙관주의적] 입장”들로(ii) 크게 나뉜다고 본다(R, VI:19-20). 칸트는 이와 같은 기존의 윤리적 품성론들을 자신의 도덕철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종교철학의 논의를 위한 전제로 재구축하는 모습을 보인다.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기존의 품성론들은 인간의 도덕적 선/악을 판단하는 데에 있

어서 대상과 근거를 잘못 선택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기성 종교신앙들의 문제는 “이 세계가 사악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식으로 인간의 외면적인 상태에서부터 선/악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칸트의 도덕철학적 원리에 따르면 도덕적 선/악의 판단은 인간의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부터 추론을 통해, 자발적 의사의 차원에서 인간이 행위의 준칙으로 선하거나 악한 원리를 채택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R, VI:21). 한편, (ii) “영웅적 입장”들의 문제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의 가능성을 자연본성으로서의 소질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소질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하여 선/악의 판단이 불가하며, 이것이 오히려 인간의 도덕적 실천의 근거가 반드시 될 수 있는 거짓은 아니라고 본다(R, VI:21). 그렇다면 기존의 두 품성론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위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품성에 있어서의 자연본성적 근본악을 주장하는 칸트의 입장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칸트가 인간의 자연본성상의 근본악의 개념을 구성할 때 주목하는 것은 인간의 성벽[*propensio*]의 차원이다. 성벽은 우연적으로 형성되지만 어떤 성벽이 형성되느냐의 문제에 인간이 평소에 어떤 행실을 하는지의 문제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소질[*Analge*]과 차이가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소질은 “생물체로서의 동물성”,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성”, “이성적 존재자이면서 귀책능력을 갖는 존재자로서의 인격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것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소질은 인간이 특수한 조건에 의해서 도덕적 소질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폐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R, VI:26-31). 그러나 일정한 자의의 경향성으로서의 성벽은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선한 성벽과 악한 성벽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칸트는 근본악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악한 성벽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하

고 있으며,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도덕법칙을 알면서도 추구하지 못하는 허약성, 도덕법칙을 추구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궁극목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인 불순성, 의도적으로 악한 준칙을 채택하는 악의성 등이다(R, VI:28-31). 칸트에 따르면 모든 실제의 인간이 그의 인간성 내에 반드시 도덕법칙과 일치할 이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도된 성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으로의 자연적인 성벽”은, 인간이 스스로 선한 성벽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기 귀책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악한 성벽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선천적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만, 인간의 품성이 자연본성적으로 악하다는 주장이 성립한다(R, VI:32).

현실의 개인들이 보편적으로 악한 본성을 갖는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근본악의 개념은 칸트 도덕철학의 연구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거리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덕철학의 단계에서 제시한 인간의 윤리적 자율성의 원리에 대한 논의와 여러 측면에서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인간이 악하다는 주장은 도덕철학의 주요 주장인 도덕법칙의 보편성, 도덕적 주체의 예지적 성격, 그리고 인간 자유의 보편성의 주요 주장은 인간이 그 품성에 있어서 근본악을 가지고 있다는 종교철학의 주장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즉, 근본악의 주장은 실제의 인간에게는 도덕법칙이 보편성을 갖지 못하고, 인간은 더 이상 예지적인 차원의 도덕적 주체가 아니며, 그리고 실제로 윤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도덕적 능력으로서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 머무른다고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도덕철학에서 제시된 원리와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Kleingeld 1999, 59). 그러나 종교철학이 주목하고 있는 현실적인 인간의 윤리적 결함과 도덕철학에 있어서의 도덕성의 최상의 원리간의 격차는,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의 인간이 도덕적 진보 또는 도덕적 완성을 가능성을 갖는다는 칸트의 역사적 차원의 사유가 갖는 가능성을 드러내며 이것은 도덕철학의 원리

와 모순되지 않는다(Kleingeld 1999; Yovel 1980). 이때 인간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실천은 일반적인 도덕적 의무의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Baron 1987). 칸트가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칸트는 인간의 “부패한 성벽”이 인간 안에 뿌리박고 있음을 “인간들의 행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은,(R, VI:33) 이것이 인간의 윤리적 실천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성서 해석과 도덕적 인간 완성의 믿음

근본악의 개념을 통해 현실적인 인간이 갖는 윤리적 결함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극복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면, 과연 이것을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찾을 것인가? 칸트 종교철학이 설정하고 있는 근본악이라는 출발점은 기존의 칸트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에서 인간의 세속적인 이성의 능력에 근거하여 하나의 자율적인 도덕적 의무를 형성했던 경로를 그대로 밟아나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근본악의 개념이 이러한 도덕적/정치적 자율성의 근거가 되는 소질인 “이성적 존재자이면서 귀책능력을 갖는 존재자로서의 인격성”이 악한 성벽에 의해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 VI:26-28). 이와 같이 근본악을 성벽과 연결했을 때 인간의 “도덕적 재생성”[moral regeneration]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부각된다(Michalson 1990, 52-55). 이러한 점에서 인간이 도덕적 실천에 의해 인류의 현실적 조건으로서의 악한 성벽에 토대한 근본악의 상태를 극복 가능하다는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즉, 현실의 인간은 도덕적 실천을 위해 도덕종교와 그에 근거한 순수종교신앙을 필요로 한다.

칸트가 기독교의 성서의 해석에 천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이다. 칸트에 따르면 성서는 “예지적인 도덕적 관계를 역사의 형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이렇게 역사적 형식으로 쓰여진 이유는 이 형식이 성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대중적인 표상방식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R, VI:78, 83).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성서에 대한 해석 작업을 통해[“신비로운 막을 벗겨낸다면”] 보편적[“모든 세계, 시대에 대하여 타당하며 구속력을 갖는”] 믿음의 근거를 얻을 수 있다(R, VI:83).

인간의 근본악 극복과 도덕적 완성의 가능성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해석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도, 신의 본질을 갖고 있는 하나의 인간형이다. 칸트는 성서에서 묘사되는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한 원리가 인격화한 이념”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에 의해 묘사되는 “신에게 흠족한 인간성”이란 “모든 고통을 세계 최선을 위해 짊어지고자 하는 인간”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본래 ‘인간의 본성’을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으나, 윤리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인간성은 도덕철학적 의미에 있어서의 도덕적 의무의 범위를 상회하는 이념으로 일반적인 인간이 이것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신의 아들에 대한 실천적 신앙 안에서” 칸트에 따르면 추구하는 마음씨를 갖거나 또는 행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R, VI:60-62).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형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인간의 마음씨가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면 이것은 언제나 타당한 것이다(R, VI:65).

칸트는 성서 속의 그리스도의 등장과 기독교 교회 수립도 역시 하나의 해석의 대상으로 제시한다. 칸트에 따르면 그리스도 이전의 유대민족은 일종의 자신들의 동의에 의해 “악의 나라”를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외적 행위만을 규제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공동체라 볼 수 있다. 고대 유대국가가 가지고 있던 신권정치는 따라서 종교적이었다기 보다는 마찬가지로 법적-정치적 질서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이자 기존의 국가의 법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서 나타났으며, 그를 법적 질서에 포괄하려는 시도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 박해를 받던 끝에 죽음까지 당했다. 이러한 측면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칸트는 “법적인 결말”과 “물리적 결말”을 나눠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리적인 결말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생명을 잃은 것

이며 이것은 패배한 것이다. 반면, 법적인 결말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사제통치 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수 도덕적 의도, 즉 인간의 모든 도덕적 마음씨를 억압하는 의식 신앙과 그런 신앙의 사제들의 권위를 전복함으로써 공적인 혁명(public revolution)을 일으키려 한 것. 이 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좌절한 것은 아닌데, 그가 죽은 후에 확산해가는 종교변혁으로 옮겨갔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R, VI:82-83).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는 악한 원리를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없었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이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소질로서의 이성의 사용이 제한되는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도 종교에 대한 사유, 특히 기독교 성서의 해석을 통해 인간이 도덕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원리적 근거를 획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석”이라는 칸트가 스스로 설정한 과제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서에 등장하는 도덕적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의 작용 자체는 일종의 해석적 지식의 획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 대한 해석적 지식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식과 같이 실제로 경험의 차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직 믿음의 차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칸트는 인간의 윤리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기독교의 성서를 이해하고 있으며, 오직 이러한 측면에서만 성서신앙, 또는 성서에 근거한 믿음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3) 윤리적 자연상태에서 윤리적 공동체로

근본악의 발견과 도덕적 실천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개인 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자연상태”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주로 “종교론”의 제3논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윤리적 자연상태는 홉스적 정치적 자연상태의 개념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각자가 자기 자신의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

의) 심판관”이고 “해당 경우들에서 무엇이 각자의 (도덕적) 의무인가를 법칙에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규정하고, 그 의무를 일반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공적 힘을 갖는 권위”가 부재한 상태이다(R, VI:95). 이러한 윤리적 자연상태가 야기하는 근본 문제는 “악에 의한 부단한 반목의 상태로서, 타인과의 대면 속에서 상호 간의 “도덕적 소질을 부패시키고”, 선의지에 있어서의 상호 간의 불일치들로 인해 서로를 다시 악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R, VI:97). 이와 같은 윤리적 자연상태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자연본성적 성벽으로서의 근본악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성벽이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스스로에게 초래한 우연적 결과물이라면, 윤리적 자연상태는 인간이 윤리적 반목상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지 않아서 발생한 집단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 자연상태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한 소질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근본악의 집단적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칸트의 윤리적 자연상태의 개념의 중요한 특징은 이 개념이 현실의 인간의 삶을 비판하는 데에 있어서 폭넓은 적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칸트에 따르면 “정치적 공동체 안에서 모든 정치적 시민들은 그 자체로도 윤리적 자연상태”에 있으며, 윤리적 목적을 위해 수립된 각각의 사회는 “다시금 같은 종류의 다른 사회와의 관계에서 윤리적 자연상태”에 있다(R, VI:96). 이는 공통적인 윤리적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사회적 관계가 전반적으로 윤리적 자연상태로서 인간의 윤리적 실천을 제한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윤리적 자연상태의 조건은 앞서 언급한 정치적 공동체 안의 정치적 시민들의 관계로부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한 국가의 시민과 다른 국가의 시민들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나아가 이는 윤리적인 교설에 토대하여 형성된 현실의 종교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데, 칸트에 따르면 서로 다른 종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윤리적 자연상태는 존재한다. 이러한 윤리적 자연상태의 폭넓은 규정은 칸트의 종교철학이 매우 폭넓은 인간의 윤리적 조건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리를 형성하도록 하는 토대이다.

칸트의 종교철학은 인간의 윤리적 자연상태의 극복으로서 “윤리적 공동체”의 수립을 주장한다. 윤리적 공동체는 인간이 윤리적 자연상태의 극복을 위하여 구성한 하나의 통합된 윤리적인 체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R, VI:98). 칸트는 기독교로부터 도덕종교의 가능성을 추출해냈던 것처럼, 기독교 교회로부터 윤리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한다. 칸트에 따르면 윤리적 공동체는 “초감성적”이고(R, VI:103) 따라서 “불가시적”인 교회로서 하나의 이상적인 원형이다. 가시적인 교회들은 이와 같은 “이상에 부합하는 하나의 전체이기 위한 인간들의 현실적 통합체”이다(R, VI:101). 칸트에 따르면 참된 교회 또는 윤리적 공동체는 보편성[수적 단일성], 도덕적 동기에 대한 순정성, 구성원들간 그리고 교회-정치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관계, 그리고 교회의 기본법[윤리적 법칙]에 있어서의 불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R, VI:102). 또한 칸트에 따르면 윤리적 공동체의 기본체제는 “도덕적인 아버지 아래에 있는 가정조합”에 가까운데, 그리스도를 계기로 신의 뜻을 알게 된 인간은 “상호 간에 자유의지적이고, 보편적이며 영속적인 심정적 통합체”로 들어갈 때에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R, VI:102) 교회의 형식으로부터 도출되는 윤리적 공동체는 인간의 도덕적 동기에 의해 구성되는 한편,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국가의 경계와 관계없이 전 인류적 차원에서 보편적이고 단일한 체계를 이룬다. 그리고 윤리적 공동체는 윤리적 법칙의 원리에 근거할 뿐, 그 내부적으로는 현실의 종교 내에 상존하는 성직자와 회중 일반 간의 권력관계 또한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칸트는 윤리적 자연상태의 개념을 정치적 자연상태의 개념과의 대비 속에서 파악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윤리적 공동체”[*ethisch Gemeinwesen*]의 개념을 칸트는 “정치공동체”[법적 공동체; *rechtlich Gemeinwesen*] 개념과 비교함으로써 구체화한다. 정치적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이 사회계약에 의해 법적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윤리적 자연상태의 인간은 공통의 덕법칙에 의거하여 하나의 통합된 윤리적 공동체를 수립한다(R, VI:97-98). 여기에서 나타나는 칸트의 독특한 주장은 윤리공동체 역시도 정치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적인[*öffentlich*] 법칙수립”에 복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는 정치공동체-윤리공동체 양자 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치공동체가 이를 구성하는 다중의 보편적 의지에 의하여 강제적인 법체계를 입법하는 반면, 윤리적 공동체는 시민들이 이러한 법체계의 입법자일 수 없다. 또한 정치적 공동체가 가시적인 외면적 행위들의 “적법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는 반면, 윤리적 공동체는 인간의 “(내적) 도덕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인간이 직접적인 윤리적 공동체의 입법자일 수는 없다. 칸트에 따르면 윤리적 공동체의 법체계는 곧 윤리적 법칙일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강제력을 갖지 않는 참된 의무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입법을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의 내면을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세계지배자로서의 신”만이 이러한 윤리적 공동체의 합당한 입법자일 수 있다(R, VI:99). 그리고 이러한 신적인 도덕적 법칙수립 아래에 있는 실제의 윤리공동체의 사례로 칸트는 기독교 교회를 들고 있으며, 윤리적 공동체가 곧 교회의 형식을 취한다고 주장한다.(R, VI:101)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칸트가 정치적 공동체와 윤리적 공동체의 관계를, 현실의 국가와 기독교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유비 속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윤리적 공동체는 실천이성에 근거한 신의 관념에 토대한다. 『종교론』에서 제기하는 신은 일종의 유신론적[*theistic*] 신이다. 이러한 유신론적 신은 “이성이 그 대상을 자연본성과의 유비에 의해 더 자세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 곧 지성과 자유를 통해 다른 모든 사물들의 원근거를 자기 안에 함유하는 존재자”로서 “세계창시자”로 여겨진다(KrV, A:631-632/B:659-660). 칸트는 『종교론』에서 이러한 유신론적인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이 도덕적 존재자들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R, VI:193).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요청된 신은 1) “전지전능한 천지 창조자”로서 “도덕적으로 신성한 법칙수립자”이자, 2) “인류의 유지자, 인류의 자비로운 통치자”, 그리고 3) “그 자신의 신성한 법칙의 관리자”로서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세 상위권력을 통합하여 갖는다(R, VI:140). 여기에서의 논의는 칸트의 정치철학에서의 논의와 대비할 경우 흥미롭다. 첫째, 칸트는 정치철학의 단계에서는 이신론의 특성을 보이지만, 종교철학에서는 유신론적 특성을 보인다. 이는 두 실천적 사유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인 정치철학은 정치적 질서의 입법이 시민들의 이성 또는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연은 그러한 소질을 부여한 존재로서만 역할을 갖게 될 뿐 그 이상의 기능은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후자인 종교철학에서의 신은 종교적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요청된다. 둘째, 정치철학에서 원초적 계약이 실제의 국가가 역사적으로 사회계약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국가질서가 그러한 계약의 관념에 토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종교철학에서 최고의 법칙수립자로서의 신에 대한 적극적인 규명은 현실 속의 인간이 윤리적 실천을 해야 하는 의무를 보다 확고하게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 칸트는 이러한 신의 관념을 기독교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으며(R, VI:141), 이러한 신의 관념에 의거하여 칸트는 윤리적 공동체를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공동체와의 대비 속에서 윤리적 공동체는 하나의 교회의 형식으로 파악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교회의 형식은 윤리적 공동체와 여전히 거리가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이성] 종교는 윤리적 공동체의 공직자로서의 법률적 봉사자를 갖지 않으며, 그 공동체의 구성원 각자는 최고 법칙수립자로부터 그의 명령을 직접 받는다”(R, VI:153). 반면 “인간이 교회 조직을 만들어 제정법적 법칙 위에서 교회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순수 이성신앙에 끊임없이 접근하여, 시간이 가면서 교회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원리를 함유하는 한에서만 참된 교회일 수 있다”(R, VI:153) 이러한 언급 속에서 도덕종교에 의거한 진정한 윤리적 공동체는 도덕적 실천을 그 자체로서 의무로 받아들이는 모든 개인들의 사이에서 공유되는 일종의 가치체계이며, 이는 기성의 교회조직 내에 존재하는 봉직자와 회중을 통해 성립하는 일정한 위계적 종교체계와도 명확히 구분된다. 이러한 점에서 ‘윤리적 공동체’의 이상적인

개념설정은 현실의 종교적 신앙의 방식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칸트의 설명 속에서 윤리적 공동체의 개념은 애매성을 갖는다. 윤리적 공동체는 역설적으로 하나의 공동생활의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교회의 형식을 따르지만, 그와 동시에 비가시적인 교회를 이상적인 차원으로서 지향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가 현실에서 윤리적 공동체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여러 종교적 단위 중 어떤 것이 칸트가 말하는 윤리적 공동체의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칸트가 윤리적 공동체의 특성을 정치공동체와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비국가적 단위’로서 그 구성원들이 비강제적인 방식으로 윤리적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칸트가 설명하고 있는 이상적인 기준에 맞추어 윤리적 공동체의 개념을 생각해보다도, 이것은 비가시적이라는 점에서 이때의 인간들의 공동생활이 어떠한 성격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칸트가 제시하는 윤리적 공동체의 개념은 애매성으로 인해 그 자체의 명확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오히려 윤리적 공동체 개념을, 현실의 인간이 이루고 있는 정치와 종교를 포함하는 사회적 삶의 다양한 형태들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윤리적인 실천에 근거하여 삶의 방식을 재편성하도록 촉구하는 이념적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윤리적 공동체는 일종의 제도로서 인간들에 의해 수립되어 실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이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하는 이상적인 윤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인간의 도덕적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이 그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칸트 종교철학의 정치적 함의

『종교론』에서 칸트가 제시하는 “철학적 신학”의 작업은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인간이 도덕법칙을 실천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종교의 필연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요소는 인간이 도덕법칙에 따르는 자신의 선행 의도에 의한 행위가 그 결과에 있어서도 반드시 선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인간은 고유한 능력에 의해 자신의 의사에 있어서의 선행 의도는 결정할 수 있으나,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따라서 결과에 있어서의 최고선을 보증해줄 수 있는 절대적 보증자로서의 신의 개념이 요청되고, 이러한 도덕적 목적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도덕종교이다. 둘째, 이러한 도덕종교의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해석해내는 것이다. 칸트는 인간의 악한 상태로부터 시작하여 선행 원리의 승리로 나아가는 기독교의 근본 원리에 초점을 두어, 원죄, 그리스도, 기독교 교회와 같은 기독교 성서의 주요 요소들을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칸트는 모든 인간들이 윤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내적인 결함에 의해 도덕적 실천을 해나간다면 최종적으로 인류 보편의 도덕적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칸트의 도덕종교 개념의 특징은 앞에서 살펴봤듯 인간들이 신앙을 공유하는 윤리적 공동체라는 일종의 사회적 성격을 갖는 단위를 구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의 형식을 갖는 윤리적 공동체는 칸트 종교철학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윤리적 공동체 그 자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듯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 칸트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단위들도 이들이 도덕적 원칙의 공유 하에 윤리적 실천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공동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러한 집단들이 동시에 윤리적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단계인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정신적이고 초감성적인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이

상적인 차원에서 구상되고 있는 윤리적 공동체는 현실 속 인간의 사회적 삶의 전반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이념적 기준이다.

종교철학은 인간의 실질적인 도덕적 실천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종교철학의 주요 논의는 인간의 삶의 조건에 대한 고려가 담겨있다. 칸트는 기독교를 도덕종교의 개념을 통해 재해석하면서 현실의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가하는 한편, 윤리적 공동체의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정치공동체의 기본적인 성격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측면은 칸트의 종교철학이 다양한 층위에서 정치적인 함의를 내포하게 되는 이유이다.

첫째, 칸트의 종교철학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명확한 영역상의 분리의 원칙을 제공한다. 1792년 『종교론』의 출간과정에서 발생한 검열문제의 경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국가와 교회의 결탁, 나아가 정치권력과 종교적 권위의 결탁은 시민들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디센소는 칸트의 종교철학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로서의 정치와 종교의 결합은 정치권력이 종교에 강제력을 제공하고, 반대로 종교가 정치권력에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의 타율성을 강화한다(DiCenso 2011, 282). 『종교론』에서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결탁의 문제는 유대 신정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드러나는데, 유대 신정정치의 특징은 단지 외면적인 강제의 체계에 불과한 국가를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최초 소유자의 불멸의 권리”를 보존하는 데 공헌하였을 뿐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결합상태는 “악의 국가”이다(R, VI:79-80). 정치와 종교의 권력적 결탁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검열일 것이며, 칸트 자신이 검열로 인한 고초를 겪은 이후 1793년에 출간한 『종교론』의 서문과 1798년의 「논쟁」은 이러한 검열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결탁과 그에 따른 검열의 문제는 신학의 자유, 나아가 철학을 비롯한 학문의 자유도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였으며, 칸트의 종교철학은 텍스트 외적으로도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De Vries 2001). 이러한 문제에 관련한 칸

트의 종교철학의 핵심적인 주장은 정치와 종교의 결합으로 발생한 타율성의 고리를 종교의 자유화를 통해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DiCenso 2011). 이러한 측면은 칸트가 윤리적 공동체가 갖는 성격을 국가와의 대비 속에서 규정하고, 특히 윤리적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리에 국가의 외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상태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R, VI:102).

둘째, 칸트 종교철학은 종교를 통해 인간의 사회적 삶 전반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반목과 타율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때 정치공동체의 현실적-원리적 한계는 핵심적인 비판의 대상이다. 『종교론』 3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종교적 삶의 궁극적인 형태로서 제시되는 윤리적 공동체의 개념은 인간의 현실적인 사회적 삶을 윤리적 자연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성된 개념이다. 여기에서 정치공동체 구성원 간의 윤리적 반목과 정치공동체 간의 국제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곧 윤리적 자연상태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타율적인 상태에 머물게 된다. 칸트에 따르면 윤리적 자연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윤리적 공동체의 수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때 종교는 정치적 차원에서 수립 가능한 질서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사회적 삶 전반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단적인 예로 정치공동체가 해결할 수 없는 교회 내 성직자와 평신도의 불평등한 관계의 문제는 윤리적 공동체의 수립을 촉구하는 종교철학적 차원의 주장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칸트 정치철학의 논의는 정치권력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으며, 교회는 자체의 조직을 설립하고 신앙과 제례의 형식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유한 권한을 갖는다(MM, VI:327). 이러한 원칙은 현실의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사제-신도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말한다. 칸트의 원칙상 교회가 신도에게 봉사를 강요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법에 근거하여 있을 경우 가시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것만 아니라면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칸트는 종교철학을 통해 현실의 기독교 교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제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으며 교회 내의 평등주의의 원칙을 주장한다(R, VI:153). 칸트가 제시하는 종교적 삶의 궁극적인 형태로서의 윤리적 공동체의 개념은 정치적 질서의 범위를 넘어선 인간의 삶 전반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이념적 기준이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질서의 한계에 대한 고려로부터 그 기본적인 성격을 부여받는다.

셋째, 칸트 종교철학은 전술하였듯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분리하고, 종교적인 원리에 의한 정치질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와 종교가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종교는 국가가 없이는 성립이 불가능하다. 칸트에 따르면 윤리적 공동체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정치공동체의 시민일 수밖에 없다(R, VI:96). 반면, 칸트에 따르면 교회는 국가를 위해 선한 시민들을 육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에 대하여 부여되는 혹은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외적 강제요소를 방지해야 한다. 칸트에 따르면 외적 강제는 참된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신자들의 자유의지의 진보를 저해하며, 이러한 윤리적 공동체의 형식을 정치적인 법령에 종속시킴으로써 선한 시민의 육성을 방해한다(R, VI:134). 즉, 국가의 제도 속에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할 때, 종교는 윤리적으로 선한 시민을 육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윤리적 실천의 체계로서의 종교의 본질을 규정하는 칸트의 종교철학이 내포하는 간단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정치적 함의를 드러내는데, 개개인의 인간이 일상에서 도덕적인 실천을 지속하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을 갖추어 나갈 때, 이들이 구성하는 정치공동체는 그 내부에 선한 시민들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칸트는 정치와 종교를 상이한 원리에 의해 구성되는 별도의 영역로서 이해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정치철학과 종교철학이라는 별도의 주제적 논의 속에서 각각의 영역이 갖는 정당성과 인류 전체 차원의 보편적 질서를 구성할 수 있는 원리적 가능성을 타진했다. 칸트의 실천철학적 사유에 있어서 정치와 종교의 두 영역은 기본적으로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종교철학의 논의는 정치와 종교가 단순한 양립의 관계를 넘어서 현실 속에서 중첩되면서 상호 간에 독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칸트 실천철학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IV. 결론:

칸트 실천철학에 있어서의 정치와 종교의 긴장

전 세속주의 시대였던 근대 초기의 유럽은 유럽인들의 정신문명의 토대를 이루고 있던 기독교의 절대적 권위가 세속주의적 세계관의 등장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던 시기였다. 절대주의 국가의 경험에 의한 국가 이성[*raison d'état*] 개념이 등장하고 인간의 고유한 합리성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으며, 근대과학의 성과로 새로운 우주관과 시간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는 문예운동 속에서 지성계가 성숙하고 계몽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시민혁명이 일어났다(Koselleck 2000). 이것은 근대 이전의 전통적인 정치와 종교의 관계, 즉, 원리적인 차원에서 정치질서가 종교적 세계관 내에 포섭되어 있으면서, 현실적으로는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이 상호 결합하여 시민들을 지배하는 형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했다. 근대 초기 유럽에서 형성된 사회계약적 사유의 흐름은 인간이 자유로운 능력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곧 전통적인 종교적 질서로부터 분리된 세속적 정치질서가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였다. 칸트의 실천철학은 위와 같이 전통적인 종교적 질서와 새롭게 형성된 세속적 정치질서의 두 원리가 대립적으로 공존하는 시기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칸트 실천철학은 도덕철학의 단계에서 자율성의 개념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서의 실천이성 또는 의지의 개념을 근거로, 정치와 종교의 두 영역을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다. 칸트 정치철학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질서가 시민들의 보편적 동의에 근거한 자율적인 입법 행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원리를 밝힘으로써 세속적 정치질서를 정당화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현실의 국가가 시민을 통치방식이 변화하도록 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공했다. 나아가 칸트 정치철학은 공화주의적인 입법에

의해 구성된 정치질서가 보편적 세계평화와 자율적인 시민의 육성이라는 정치적 이상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칸트 종교철학은 인간이 현실의 윤리적인 결함을 극복하고 도덕적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인간 이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주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칸트는 도덕종교의 개념에 토대하여 기독교 신앙을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완성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근거와 종교적 실천의 원리를 도출한다. 이때 칸트는 기독교의 교회 형식을 윤리적 공동체로 재해석함으로써, 가시적인 교회 조직을 초월하여 인간이 도덕종교에 대한 이성적인 믿음을 공유하면서 형성하는 상호 간의 사회적 상태의 이상을 제시한다. 우리는 칸트 실천철학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정치철학과 종교철학을 교차적으로 살펴보면, 칸트의 사유 속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종교의 독특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칸트 실천철학의 핵심적인 실천적 사유인 정치철학과 종교철학을 균형있게 검토함으로써, 정치와 종교의 두 질서의 영역이 상호 간에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칸트는 기독교 신앙에 토대한 종교적 질서와 새롭게 형성되고 있던 세속적 정치질서가 대립적으로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철학과 종교철학의 사유를 통하여 정치와 종교가 각각 보편화 가능한 질서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때 정치와 종교는 구성원리에 있어서 상호 부정적인 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정치와 종교는 공존하며 현실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삶에 대하여 각각 독자적인 영향을 미친다. 칸트는 이처럼 정치와 종교를 별개의 질서로서 양립시키지만, 상호 배제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보편적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는 정치와 종교의 두 상이한 영역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중첩되는 한편 서로 다른 보편적 질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호 포섭의 경향을 갖는다. 칸트는 이때 정치와 종교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어느 쪽에도 명확한 우월성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존하도록 한다. 이때 상호 포섭적인 두

보편적 질서의 공존은, 단순한 양립을 넘어 두 질서 간의 팽팽한 긴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균형이 발생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칸트의 실천철학적 사유 속에서의 정치와 종교의 긴장은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칸트의 사유 속에서 정치와 종교는 각각의 구성원리에 있어서 상호 배제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칸트 실천철학의 일관된 주제는 인간이 이성적 능력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자유를 확보하는 원리를 밝히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철학과 종교철학은 각각의 주제 영역에서 인간이 자유를 획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실천적 사유의 일환이다. 칸트는 정치와 종교가 각각 상이한 원리에 의해 구성된다고 본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는 인간의 외적 행위의 질서수립이라는 측면에서 곧 법적 문제에 직결되며, 칸트 정치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인간이 이성적 능력에 의해 법적-정치적 공동체를 입법하는 행위이다(MM, VI:218-219, 306-311). 여기에서 정치질서의 입법은 순전히 인간의 실천이성 또는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인간을 넘어선 어떤 초월적 존재자의 의지도 개입할 수 없다(PP, VIII:363).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질서는 오직 인간의 외적 행위에만 관련하며, 시민의 윤리적인 성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종교는 마찬가지로 인간의 실천이성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도덕적 완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자인 신에 대한 믿음이 필연적임을 주장한다. 이때 인간은 종교적 질서를 직접 입법할 권한은 없으며, 오직 신이 부여한 도덕법칙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성서 등에 의해 계시되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의 가능성을 믿어야만 한다(R, VI:60-65, 199). 그리고 이때 종교는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갖지 못하되, 인간의 내적인 마음씨에 대해서는 도덕적 의무를 부여한다. 정리하면, 세속적 정치의 원리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종교의 고려 대상인 인간의 도덕적 성품이나 신의 명령 등은 완전히 배제되며 이러한 측면을 정치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가하다(R, VI:96). 또한 종교적 원리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오직

인간의 윤리적인 성품만이 고려가 되고 있으며, 인간의 외적 행위에 대한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와 종교는 그 구성 원리의 측면에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호 배제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칸트가 구상한 정치적 원리는 그 고유한 질서 속에 현실의 종교적 요소를 포섭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정치질서에 대한 구상 속에서도 종교는 원리적인 차원에서만큼은 여전히 고유한 독립적 영역을 유지한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는 현실 세계 속에서 보편화 가능한 질서이며 그 고유한 원리에 의하여 종교의 외적인 요소를 그 질서 내에 포섭한다. 정치는 인간의 자유에 의거한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외형적인 틀을 제공한다. 립스틴의 지적처럼 정치질서는 개인의 소유를 확정지음으로써 보편적 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할 공간을 제공하며, 이것은 윤리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Ripstein 2009). 이러한 외적 질서는 시민들이 각자의 자유를 보편적으로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법적인 강제력을 발생시키며, 정치공동체 내에 포함되어있는 종교적 시민과 종교기구에 대하여 강제력을 갖고, 종교적 시민의 실천이 법적 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제한다. 또한 정치공동체는 종교행위가 공적인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 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종교에 대한 강제력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형태이며, 국가가 종교공동체 내부의 교리나 구성원리 등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하다(MM, VI:368-369). 즉, 정치적 질서가 보편화되더라도 정치적 원리가 그 자체로서 종교적 원리에 대해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마찬가지로 칸트가 구상한 종교적 원리는 그 고유한 질서 속에 현실의 정치적 요소를 일부 포섭하지만, 이와 같은 보편적 종교질서에 있어서도 정치적 원리의 독자성은 완전히 부정되지 않는다. 『종교론』 3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치공동체와 윤리공동체의 극적인 대비는, 칸트가 종교적 질서를 구상함에 있어서 현실의 정치적 질서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토대가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정치공동체 내의 시민들 간의 윤리적 반목, 나아가 정치공동체 간의 반목은 전적으로 합일된 윤리적 원칙이 없는 윤리적 자연상태의 문제를 보여주며, 이때 인간은 불가피하게 악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R, VI:94). 나아가 칸트에 따르면 모든 정치공동체는 “덕의 법칙들에 따름 마음들에 대한 [종교적] 지배”가 있기를 희망하는데, 왜냐하면 정치공동체의 통치능력[“지배의 강제수단”]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 95-96). 이러한 측면에서 칸트가 구성하는 종교적 질서는 현실의 정치적 질서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서, 신의 관념에 근거하여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윤리적 원칙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질서의 목표는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 “하나의 절대적 윤리적 전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들과의 일치에 향하여 노력”하는 것이다(R, VI:96). 이것은 “통합된 힘으로써 악에 대항하는, 지속적이고 점점 확대되어 순전히 도덕성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이며, 윤리적인 원칙이 공유되는 “사회를 인간의 주위에 둘러치는” 작업이다(R, VI:94). 이러한 보편적 종교질서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도 칸트는 이러한 종교질서가 정치질서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칸트에 따르면 종교는 정치적 공동체의 근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¹⁰⁾

넷째, 상호배제적인 원리에 근거한 정당한 보편적 질서를 지향하는 정치와 종교의 두 영역은 현실적 차원에서 중첩되며 상호 포섭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때 칸트는 두 영역을 원칙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정치와 종교가 긴장관계 속에서 공존하도록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칸트에 따르면 정치와 종교의 두 영역이 상호 포섭의 결과 하나의 단일한 질서로 완전히 결합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종교의 결합은 사실상 근대 이전의 유럽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던 지배의 양식이었으며, 칸트가 종교철학적 저술로 인하여 겪었던 검열의 문제도 사실상 이러한 정치종교적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칸트는 『종교론』에서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결합의 문제를 고대의

10) “도대체가 정치적 공동체가 기초에 놓여 있지 않고서는 윤리적 공동체는 인간에 의하여 전혀 성취될 수 없을 터이다.”(R, VI:94)

유대 신정정치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드러낸다. 칸트에 따르면 유대 신정정치는 곧 “악의 국가”인데, 왜냐하면 외면적인 강제의 체계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을 근본적인 타율성의 상태에 머물게 했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정치와 종교의 결합은 곧 외면적인 강제의 체계를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정치적 지배자의 권리를 영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R, VI:79-80). 칸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등장과 유대 신정정치체제에 대항한 기독교 혁명은 곧 참된 종교의 등장에 의한 정치종교적 타율성의 극복을 의미한다(R, VI:80-85). 칸트가 그리스도에 의한 기독교 혁명에 대한 언급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본질의 회복이지만, 이것은 곧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해체되고 두 영역이 별도의 질서로서 성립하도록 하는 계기인 것이다. 나아가, 칸트는 정치와 종교를 별도의 질서로서 상호 독립적으로 제시하면서도, 두 질서 모두가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을 밝혔다. 즉, 칸트의 실천철학적 사유 속에서 정치와 종교는 상호 배제적인 원리에 의해 구성되는 정당한 질서로서 양립하는 동시에, 각각의 영역에서 수립하고 있는 질서의 보편화의 과정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상호 포괄하는 이중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정치는 그 법적인 질서 속에서 종교공동체들을 지속적으로 포섭하고 그 외적인 차원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종교는 현실의 정치질서가 갖는 비윤리성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시민들의 윤리적 발전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요컨대, 칸트의 실천철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별도의 영역으로서 원칙적인 공존을 유지하는 한편, 지속적인 상호 포섭의 과정 속에서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

칸트 실천철학의 구도 속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종교 사이의 독특한 긴장 관계에 대한 발견은, 기존의 칸트의 사유를 토대로 정치와 종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던 오늘날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유주의적 칸트 해석에서 강조되는 세속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의 명확한 경계선에 대한 설명이 갖는 애매성을 확인할 수 있다. 번스틴은 칸트가 본인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철학에 있어서 세속주의자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앙의 근거를 침식하고 본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칸트의 도덕과 정의에 대한 포괄적 세계관에 대하여 비판적이면서도 칸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칸트가 도덕이론에서 초월적 신의 역할을 배제하고 도덕성과 종교적 신앙의 사이에 “날카로운 구분선”[sharp divide]을 그었다는 점에 있다(Bernstein 2009, 1038-1040) 그러나 이러한 번스틴의 정치와 종교 사이의 구분선에 대한 관념은 사실상 칸트에 있어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단순한 ‘양립’의 차원에서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칸트의 도덕철학이 갖는 세속주의적 성향과 실천철학적 차원에 있어서의 정치와 종교 사이의 “구분선” 자체는 분명히 유효하지만, 칸트 종교철학의 적극적인 정치적 함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러한 구분선 위에서 벌어지는 두 영역 간의 지속적인 상호 포섭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종교는 종교 자체의 영역에 머물러야 하며 정치적 영역의 구성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적 시민에 대한 규범적인 영향을 통하여 정치질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곧 칸트가 사유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단순한 양립의 차원을 넘어선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공존”에 더 가깝다. 하버마스의 경우 칸트의 종교철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풍부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Habermas 2008). 그러나 그가 칸트에게서 발견하고 있는 지식과 신앙의 명확한 경계[boundary]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우드는 칸트 철학으로부터 실용적 믿음[practical belief/pragmatische Glaube]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특정한 행위를 위하여 갖게 되는 믿음”이다(Wood 2009, 18). 우리는 이러한 실용적 믿음의 사례를 칸트의 종교철학에 찾을 수 있으며, 칸트의 철학적 신학의 핵심은 실천이성의 목적을 위하여 “신이 도덕적 존재자들로서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R, VI:139). 이때 철학적 신학은 실천적 함의를 위하여 일종의 “이성적 믿음”을 삶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식-신앙의 경계에서 어느 편에 속하는지 여전히 애매하다고 생각한다. 칸트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의 일반적 특징은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사이에 명확한 구분선을 긋고, 칸트를 세속적 이성을 정당화한 철학자로서만 해석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을 때 칸트는 세속적인 정치질서와 윤리적 차원의 종교질서가 영역적으로 구분되고 공존하는 전제하에서, 종교적 믿음 자체가 정치영역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칸트를 세속적 자유주의자로 해석하는 현대 자유주의의 일반화된 해석은 칸트 실천철학의 핵심적인 사유의 한 측면을 잘 드러내는 것이지만, 이때 종교철학의 적극적인 정치적 가능성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칸트에 있어서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바라보는 연구 유형의 두 번째는, 정치와 종교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주로 세속적 정치영역의 확립된 형태를 전제로 하여 칸트가 구상한 종교가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인가를 해석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앞선 절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칸트는 종교철학에서 윤리적 공동체 또는 종교의 사회적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가 정치공동체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종교의 관계의 형태에 대한 해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이너는 칸트의 종교가 국가의 강제력에 대비된다는 점에서 ‘시민적 장’[civic sphere]의 형태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칸트의 종교철학의 논의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한 결과이다. 그런데 과연 칸트의 정치철학적 사유 속에서 이러한 시민적 장으로서의 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칸트 정치철학의 논의 속에서 고려했을 때 이것은 불분명한데, 이러한 영역은 하나의 정치질서 내에서 별도의 주권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칸트의 정치철학적 논의와 모순이 된다. 또한 디센소에 따르면 가시적인 제도로서의 국가에 대비하여 종교가 일종의 정치적인 문화[culture; le

politique]일 수 있는데, 이것은 역시 국가의 성격에 대비하여 부정형적인 형태로서 제시되는 종교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한 방편인 것으로 생각된다. 칸트에 따르면 종교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형식을 취하지만 이것의 형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라일리의 부분적인 언급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공동체와 윤리적 공동체 간의 우위에 대한 관심에 대한 측면이다(Riley 2007). 칸트에서 윤리적 공동체가 정치적 공동체에 비하여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근거는 도덕철학의 ‘목적의 국가’의 개념과 윤리적 공동체 사이의 연관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칸트의 실천적 사유들은 도덕철학에 토대해 있고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도덕철학적 사유의 직접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우위를 명시하는 것은, 정치나 종교의 어떤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칸트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치공동체와 윤리공동체는 양자 사이에 우위를 설정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별도로 공존하면서 매 실천적 순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별도의 질서로 이해하는 것이 칸트의 의도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칸트의 실천철학의 전체적인 구도에 근거하여 그가 사유한 정치와 종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정치사상 분야에 있어서 칸트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정치철학의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주된 해석의 방향은 도덕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세속적 인간이성에 의해 세속적-자유주의적 정치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칸트의 철학체계 속에서 그것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상 연구에서 비교적 적은 주목을 받아왔던 종교철학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나아가 실천철학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칸트가 원리적으로 구성한 정치와 종교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에 대한 균형잡힌

해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칸트의 실천철학 속 정치와 종교에 대한 경험적, 원리적 이해들의 특성을 밝히고, 특히 칸트의 사유 속에서 정치와 종교가 정당한 질서로서 상호 독립적으로 성립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칸트 실천철학의 전반적인 구도에 대한 고려 속에서 정치철학과 종교철학의 각 요소를 상세하게 검토함으로써 칸트 철학 속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균형잡힌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유사한 관심에서 시도된 기존의 정치사상적 연구가 충분히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앞으로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칸트의 실천철학적 작업 속에서 발견되는 정치와 종교의 독특한 관계는, 오늘날의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근대국가체제의 정치적 세속주의의 원칙이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탈(脫)세속주의적 조건에 대하여 하나의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칸트가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사유했던 근대 초기의 유럽은 오늘날에 비하여 정치적 상호작용의 범위도 좁았고, 칸트가 실질적으로 고려했던 종교적인 요소도 유럽의 보편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화의 심화 속에서 정치적 상호작용의 관여가 전(全)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그만큼 종교적 다양성 자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된 오늘날의 조건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칸트가 경험했던 정치와 종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범유럽적인 기독교 질서와 유럽 내의 개별적인 국민국가의 관계에 국한되었던 반면, 오늘날의 정치와 종교의 문제는 개별 국가나 지역, 대륙, 나아가 전세계적 정세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갈등의 축도 복잡하다. 오늘날 정치와 종교의 문제는, 다양화된 종교 간의 갈등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제국(諸國)과 중동지역에 토대를 둔 이슬람 민족주의 간의 대립구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공간적으로 중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복잡다단한 오늘날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칸트의 원리적인 사유는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칸트는 정치와 종교의 원리가 갈등하는 가운데, 양자가 정당한 질서로서 공존할 수 있는 원리를 구상했다. 정치와 종교를 그 구성원리의 차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구상하고 이를 통해 정치와 종교의 현실에 대하여 변화를 촉구하는 규범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설정했다. 칸트는 정치와 종교의 구성원리[공화주의적 헌법의 입법 또는 도덕종교]에 대한 사유를 통해 현실의 정치공동체와 종교공동체에 대하여 행동의 방식을 촉구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때 칸트가 제시한 규범적 기준들은 오늘날에도 원칙적으로 타당성을 갖는다. 그리고 특히 칸트의 유대 신정정치에 대한 비판은 지역주의·민족주의가 종교와 결합하여 발생하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와 종교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적인 문제는, 칸트에 따르면 종교적 차원에서 종교의 본질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칸트의 사유 속 정치와 종교의 긴장관계는, 오늘날 종교공동체가 갖는 적극적인 정치적 목소리의 증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의 틀이 될 수 있지만, 종교의 정치적 요구가 폭력 또는 강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근본적인 비판의 대상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칸트 실천철학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통찰은 매우 원론적인 수준의 함의만을 제공하며, 현대의 복잡한 정치와 종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경험적 조건에 대한 더 세부적인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의 정치적 발흥이 두드러지면서 근대적 삶의 토대를 이뤄왔던 세속주의적 정치질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의 탈세속주의적 조건은 이와 같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원리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것은 21 세기의 정치적 삶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속적 정치영역과 윤리적 실천체계로서의 종교질서를 상호 독립적으로 설정한 가운데 정치와 종교 간의 긴장관계에 의한 공존의 원리를 구상했던 칸트 실천철학의 사유는 오늘날의 환경이 새롭게 요청하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설정의 작업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칸트 저작

- Kant, Immanuel [1781(A), 1787(B)] 1999. *The Critique of Pure Reason*. trans. Paul Guyer and Allen W. Wo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글역본) 2006.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역. 서광사.
- Kant, Immanuel [1784] 1991. “An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Enlightenment?’” in *Kant: Political Writings*. ed. Hans Reiss. trans. H. B. Nisb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t, Immanuel [1784] 1991. “Idea for a Universal History with a Cosmopolitan Purpose.” in *Kant: Political Writings*. ed. Hans Reiss. trans. H. B. Nisb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t, Immanuel [1785] 2002. *Groundwork for the Metaphysics of Morals*. trans. Allen Wood. Yale University Press.
(한글역본) 2005.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역. 서광사.
- Kant, Immanuel [1788] 2002.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trans. Werner Pluhar. Hackett Publishing.
(한글역본) 2009.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역. 서광사.
- Kant, Immanuel [1790] 1987. *Critique of Judgment*. trans. Werner Pluhar. Hackett Publishing.
(한글역본) 2009. 『판단력비판』. 백종현 역. 서광사.
- Kant, Immanuel [1793]
(영어역본) 2011. “Religion within the Boundaries of Mere Reason” in *Religion and Rational Theology*. ed. Allen Wood and George Di Giovanni. trans. George Di Giovanni.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글역본) 2011.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백종현 역. 서광사.
- Kant, Immanuel [1793] 1991. “On the Common Saying: ‘This May Be True

- In Theory, But It Does Not Apply In Practice’.” in *Kant: Political Writings*. ed. Hans Reiss. trans. H. B. Nisb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t, Immanuel [1794] 2011. “The End of All Things” in *Religion and Rational Theology*. ed. Allen Wood and George Di Giovanni. trans. Allen Wo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t, Immanuel [1795] 1991.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in *Kant: Political Writings*. ed. Hans Reiss. trans. H. B. Nisb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t, Immanuel [1797] 1996. *Kant: The Metaphysics of Morals*. trans. Roger J. Sulliv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글역본) 2012. 『윤리형이상학』. 백종현 역. 서광사
- Kant, Immanuel [1798] 1991. “The Contest of Faculties.” in *Kant: Political Writings*. ed. Hans Reiss. trans. H. B. Nisb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2차연구문헌

- Allison, Henry E. 1990. *Kant's Theory of Free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lison, Henry E. 1996. *Idealism and Freedom: Essays on Kant's Theoretical and Practic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on, Marcia. 1987. “Kantian Ethics and Supererogation.” *The Journal of Philosophy* 84(5): 237 - 262.
- Beck, Lewis White. 1960.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ck, Lewis White. 1969. *Early German Philosophy: Kant and His Predecessors*. Belknap Press.

- Beiner, Ronald. 2010. *Civil religion: A Dialogue in the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iner, Ronald, and William James Booth, ed. 1996. *Kant and Political Philosophy: The Contemporary Legacy*. Yale University Press.
- Bernstein, Richard J. 2001. "Radical Evil: Kant at War with Himself." in *Rethinking Evil*. ed. Maria Pia Lar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rnstein, Richard J. 2009. "The Secular-Religious Divide: Kant's Legacy." *Social Research: An International Quarterly* 76(4): 1035 - 1048.
- Bhargava, Rajeev. 2011. "Rehabilitating Secularism." in *Rethinking Secularism*. ed. Craig Calhoun, Mark Juergensmeyer, and Jonathan VanAntwerpen. Oxford University Press.
- Bohman, James. 2000. *Public Deliberation: Pluralism, Complexity, and Democracy*. MIT press.
- Brown, Wendy. 2009.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yrd, B. Sharon. 1989. "Kant's Theory of Punishment: Deterrence in its Threat, Retribution in its Execution." *Law and Philosophy* 8(2): 151 - 200.
- Byrne, James M. 1996. *Religion and the Enlightenment: From Descartes to Kant*.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Calhoun, Craig, Mark Juergensmeyer, and Jonathan VanAntwerpen, eds. 2011. *Rethinking Secularism*. Oxford University Press.
- Cassirer, Ernst. 1963. *Rousseau, Kant, Goethe*. Harper.
- Charney, Evan. 1998. "Political Liberalism,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Public Spher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01): 97 - 110.
- Cheah, Pheng. 2003. *Spectral Nationality: Passages of Freedom from Kant to Postcolonial Literatures of Liber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 Colas, Dominique. 1997. *Civil Society and Fanaticism: Conjoined Histor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 Cooke, Maeve. 2007. "A Secular State for a Postsecular society? Postmetaphysical Political Theory and the Place of Religion." *Constellations* 14(2): 224 - 238.
- Critchley, Simon. 2007. *Infinite Demanding: Ethics of Resistance, Politics of Commitment*. Verso.
- Critchley, Simon. 2012. *The Faith of the Faithless: Experiments in Political Theology*. Verso.
- Dallmayr, Fred. 2012. "A Secular age? Reflections on Taylor and Panikkar."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of Religion* 71(3): 189 - 204.
- Dallmayr, Fred. 1999. "Rethinking Secularism (with Raimon Panikkar)." *The Review of Politics* 61(04): 715 - 735.
- Danilovic, Vesna, and Joe Clare. 2007. "The Kantian Liberal Peace (Revisite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2): 397 - 414.
- Davidovich, Adina. 1993. "Kant's Theological Constructivism." *Harvard Theological Review* 86(03): 323 - 351.
- Davidovich, Adina. 1994. "How to Read Religion within the Limits of reason alone." *Kant-Studien* 85(1): 1 - 14.
- Davis, Kevin R. 1991. "Kantian Publicity and Political Justice."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8(4): 409 - 421.
- Davis, Kevin R. 1992. "Kant's Different 'Publics' and the Justice of Publicity." *Kant-Studien* 83(2): 170 - 184.
- Despland, Michel. 1973. *Kant on History and Religion: With a Translation of Kant's "On the Failure of All Attempted Philosophical Theodicies"*. McGill-Queen's Press.
- DiCenso, James. 2011. *Kant, Religion, an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yle, Michael W. 1983.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 Public Affairs* 12(3): 205 - 235.
- Ellis, Elisabeth. 2005. *Kant's Politics: Provisional Theory for an Uncertain*

- World*. Yale University.
- Ellis, Elisabeth. 2008. *Provisional politics: Kantian Arguments in Policy Context*. Cambridge Univ Press.
- Firestone, Chris L. 2009. *Kant and Theology at the Boundaries of Reason*. Ashgate Publishing.
- Formosa, Paul. 2008. “‘All Politics Must Bend Its Knee before Right’: Kant on the Relation of Morals to Politics.” *Social Theory and Practice* 34(2): 157 – 181.
- Di Giovanni, George. 2005. *Freedom and Religion in Kant and His Immediate Successors: The Vocation of Humankind, 1774 – 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dlove, Terry F. 1989. *Religion, Interpretation, and Diversity of Belief: the Framework Model from Kant to Durkheim to David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 Ronald M. 1978. *Religious Reason: The Rational and Moral Basis of Religious Belief*.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 Ronald M. 1992. *Kierkegaard and Kant: The Hidden Debt*. SUNY Press.
- Habermas, Jürgen. 2008. *Between Naturalism and Religion: Philosophical essays*. Polity.
- Habermas, Jürgen et al. 2010. *An Awareness of What is Missing: Faith and Reason in a Post-secular Age*. Polity.
- Hare, John E. 1997. *The Moral gap: Kantian ethics, Human Limits, and God’s Assistance*. Clarendon Press.
- Harrington, Austin. 2007. “Habermas and the Post-Secular Socie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0(4): 543 – 560.
- Hatfield, Gary, and Paul Guyer ed. 1992. *Cambridge Companion to Ka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ck, John. 2011. *Faith and Knowledge: a Modern Introduction to the*

- Problem of Religious Knowledge*. Literary Licensing.
- Höffe, Otfried. 2002. *Categorical Principles of Law: a Counterpoint to Modernity*. Penn State Press.
- Höffe, Otfried, and Karl Ameriks, ed. 2009. *Kant's Moral and Leg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nig, Bonnie. 1993. *Political Theory and the Displacement of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 Juergensmeyer, Mark. 2008. *Global rebellion: Religious Challenges to the Secular State, from Christian Militias to al Qaed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leingeld, Pauline. 1999. "Kant, History, and the Idea of Moral Development."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16(1): 59 - 80.
- Kleingeld, Pauline, ed. 2006. *Toward Perpetual Peace and Other Writings on Politics, Peace, and History*. Yale University Press.
- Körner, Stephan. 1969. *Kant's Conception of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 Korsgaard, Christine M. 1996. *Creating the Kingdom of E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selleck, Reinhart. 2000. *Critique and Crisis: Enlightenment and the Pathogenesis of Modern Society*. MIT Press.
- Koukouzelis, Kostas. 2009. "Rawls and Kant on the Public Use of Reason."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35(7): 841 - 868.
- Lara, Maria Pia, ed. 2001. *Rethinking Evi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ursen, John Christian. 1986. "III. The Subversive Kant: The Vocabulary of 'Public' and 'Publicity.'" *Political Theory* 14(4): 584 - 603.
- Lilla, Mark. 1998. "Kant's Theological-Political Revolution." *The Review of Metaphysics* 52(2): 397 - 434.
- Lilla, Mark. 2008. *The Stillborn God: Religion, Politics, and the Modern West*. Vintage.

- Mariña, Jacqueline. 1997. "Kant on grace: A Reply to His Critics." *Religious Studies* 33(04): 379 - 400.
- Mariña, Jacqueline. 2000. "Making Sense of Kant's Highest Good." *Kant-Studien* 91(3): 329 - 355.
- Michalson, Gordon E. 1990. *Fallen Freedom: Kant on Radical Evil and Moral Regene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bank, John. 1993. *Theology and Social Theory: Beyond Secular Reason*. Blackwell Publishing.
- Milbank, John. 2011. "Hume versus Kant: Faith, Reason and Feeling." *Modern Theology* 27(2): 276 - 297.
- Moon, J. Donald. 2003. "Rawls and Habermas on Public Reason: Human Rights and Global Justic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6(1): 257 - 274.
- Muthu, Sankar. 2009. *Enlightenment against Empi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urphy, Andrew R. 2010. *Conscience and Community: Revisiting Toleration and Religious Dissent in Early Modern England and America*. Penn State Press.
- O'Neill, Onora. 1990. *Constructions of Rea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Neill Onora, ed. 1996. *The Sources of Norm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Neill, Onora. 1997. "Kant on Reason and Religion."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18: 267 - 308.
- O'Neill, Onora. 2000. *Bounds of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quist, Stephen. 2000. *Kant's Critical Religion*. Ashgate Aldershot.
- Paton, Herbert J.. 1971. *The Categorical Imperative: a Study in Kant's Moral Philosoph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Pippin, Robert B.. 1997. *Idealism as Modernism: Hegelian Vari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ppin, Robert B. 2005. *The Persistence of Subjectivity: On the Kantian afterma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gge, Thomas. 2009. "Kant's Vision of a Just World Order." in *The Blackwell Guide to Kant's Ethics*. ed. Thomas Hill Jr. Wiley-Blackwell.
- Reder Michael, and Josef Schmidt. 2010. "Habermas and Religion" in *An Awareness of What is Missing: Faith and Reason in a Post-secular Age*. Habermas, Jürgen et al. Polity.
- Potter, Nelson. 1996. "Kant and the Moral Worth of Actions."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34(2): 225 - 241.
- Quinn, Philip L. 1984. "Original Sin, Radical Evil and Moral Identity." *Faith and Philosophy* 1(2): 188 - 202.
- Rawls, John. 1980.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The Journal of Philosophy* 77(9): 515 - 572.
- Rawls, John. 1997a. "The Idea of Public Reason." in *Deliberative democracy: Essays on reason and politics*. ed. James Bohman and William Rehg. Messach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Rawls, John. 1997b. "The Idea of Public Reason Revisited."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64(3): 765-807.
- Rawls, John. 2005.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 Rawls, John, and Barbara Herman. 2009. *Lectures on the History of Moral Philosophy*. Harvard University Press.
- Reiss, Hans, ed. 1991. *Kant: Political Writings*. trans. H. B. Nisb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ley, Patrick. 1987. "Hannah Arendt on Kant, Truth and Politics." *Political Studies* 35(3): 379 - 392.
- Riley, Patrick. 2007. "Kant against Hobbes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Moral Philosophy* 4(2): 194 - 206.
- Riley, Patrick. 1999. *Will and Political Legitimacy: A Critical Exposition of Social Contract Theory in Hobbes, Locke, Rousseau, Kant, and Hegel*.

iUniverse.

- Ripstein, Arthur. 2009. *Force and Freedom: Kant's Legal and Political Philosophy*. Harvard University Press.
- Rossi, Philip J. 2005. *The Social Authority of Reason: Kant's Critique, Radical Evil, and the Destiny of Humankind*. SUNY Press.
- Saurette, Paul. 2005a. "Humiliation and the global war on terror." *Peace Review: a Journal of Social Justice* 17(1): 47 - 54.
- Saurette, Paul. 2005b. *The Kantian imperative: Humiliation, Common Sense, Politic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Strawson, Peter. 1966. *Bounds of Sense*. Routledge.
- Taubes, Jacob. 1955. "Theology and Political Theory." *Social Research* 22(1): 57 - 68.
- Taylor, Charles. 2007. *A Secular Age*. Belknap Press.
- Taylor, Charles. 2011. "Western secularity." in *Rethinking Secularism*. ed. Craig Calhoun, Mark Juergensmeyer, and Jonathan VanAntwerpen.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Robert S. 2004. "A Kantian Defense of Self-Ownership."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2(1): 65 - 78.
- Taylor, Robert S. 2006. "Democratic Transitions and the Progress of Absolutism in Kant's political thought." *Journal of Politics* 68(3): 556 - 570.
- Taylor, Robert S. 2010. "Kant's Political Religion: The Transparency of Perpetual Peace and the Highest Good." *The Review of Politics* 72(1): 1 - 24.
- Thiemann, Ronald F. 1996. *Religion in Public Life: A Dilemma for Democracy*.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Timmons, Mark, ed. 2002. *Kant's Metaphysics of Morals: Interpretative Essays*. Oxford University Press.
- De Vries, Hent. 2001. *Religion and Violence: Philosophical Perspectives*

- from Kant to Derrid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Wolterstorff, Nicholas. 1991. "Conundrums in Kant's rational religion." in *Kant's Philosophy of Religion Reconsidered*. ed. Philip J. Rossi and Michael Wreen. Indiana University Press.
- Wolterstorff, Nicholas. 1997. *Religion in the Public Square: The Place of Religious Convictions in Political Debate*. Rowman & Littlefield.
- Wolterstorff, Nicholas. 1998. "Is it Possible and Desirable for Theologians to Recover from Kant?" *Modern Theology* 14(1): 1 - 18.
- Wood, Allen W. 1991. "Kant's Deism." in *Kant's Philosophy of Religion Reconsidered* ed. Philip J. Rossi and Michael Wreen. Indiana University Press.
- Wood, Allen W. 1999. *Kant's Ethic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od, Allen W. 2008. *Kantian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od, Allen W. 2009. *Kant's Moral Religion*. Cornell University Press.
- Wood, Allen W. 2006. "Kant's Philosophy of History." in *Toward Perpetual Peace and Other Writings on Politics, Peace, and History*. ed. Pauline Kleingeld. Yale University Press.
- Wood, Allen, and George Di Giovanni, ed. 2011. *Religion and Rational Th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tes, Melissa. 2007. "Rawls and Habermas on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33(7): 880 - 891.
- Yovel, Yirmiahu. 1980. *Kant and the Philosophy of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Zaret, David. 1992. "Religion, Science, and Printing in the Public Spheres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in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ed. Craig Calhoun. The MIT Press.

Abstract

The Relationship of Politics and Religion in Kant's Practical Philosophy

Min, GyungNam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owadays, the post-secular condition, in which the political influence of religion has been escalating and the modern principle of political secularism has become at stake, requires new ideal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In this context,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interpret the unnoticed but ideal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from the Immanuel Kant's practical philosophy with the balanced approach. Kant revealed that both politics and religion are the spheres of autonomous order constructed by human being's faculty of reason. Taken his political philosophy and religious philosophy together, this thesis tries to capture the tension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constructed upon the disparate foundation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 of Kant's practical philosophy in regard with politics-religion relationship, one needs to concern Kant's historical background, the pre-secular condition of the early modern Europe. It was a transitional period in which the religious order based on the orthodox Christian belief and newly formed political secularism coexisted in mutually opposite manner. In this context, Kant's practical philosophy intended to suggest justifiable constituting principles of politics and religion, and to demand the political-religious reality changed along with the principles.

To be specific, Kant's political philosophy justified secular legal order and its autonomous legislation by human being. In his political writings, Kant coherently justifies the construction of state or civil society

insofar as republican constitution He also suggests the expectation on universalization of political order based on the republican states.

Kant's religious philosophy argues that the practical reason requires religion for the moral practice. And it also reinterprets Christian faith from the perspective of moral religion in order to extract the principle for human moral progress. The book III of *Religion within the boundaries of Mere Reason* criticizes "political community" as "an ethical state of nature". He emphasizes the necessity of constructing "ethical community" in the form of "Church" to overcome the ethical state of nature.

Taken Kant's arguments from political philosophy and religious philosophy together in a balanced way, this thesis interprets the tension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which are constructed ideally. The political order legislated voluntarily by human being and the religious order dependent on the rational belief in transcendental being or God are mutually exclusive to each other at the level of constituting principle. Nevertheless, while coexisting simultaneously, political order and religious order tend to overlap and embrace each other. By examining it, we can find the tension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beyond the mere compatibility between them.

At last, this thesis has three implications. First, this thesis suggests a balanced understanding of Kant's practical philosophy and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Kant's attitude toward secularism and religion. Second, this thesis sheds light on the Kant's religious philosophy which has been less covered in political theory and figures out its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relationship with political order. Third, in the context of post-secular period, this thesis captures the ideal tension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y that may help establish a new ideal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

**keywords: Kant's practical philosophy, politics and religion, secularism,
republican constitution, moral religion, ethical community**

Student Number: 2009-20099